
“ 알뜰 재정, 살뜰 민생 ”

2024년 예산안

2023. 8.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순서

I.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1
II. '24년 예산안 전체모습	3
III. 재정 정상화	6
IV. 20대 핵심과제	8
V. 중점 투자방향	9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별첨] 분야별 투자방향	41

I. '24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 ◇ '23년 예산 편성시 확장재정 →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한 데 이어, '24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체질개선에 중점
- ◇ 약자복지, 미래준비, 양질의 일자리, 국방·안전·법치 등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1 [재정기조]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건전재정기조는 흔들림 없이 견지

- 건전재정 기조는 미래 부담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견지
- * (Fitch, '23.3월) "강력한 재정건전화는 재정적자를 축소하여 신용등급 하방압력 완화"
(IMF, '23.5월) "정상화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을 뒷받침하여 인플레이션 대처에 기여"

2 [재정 정상화] 재정낭비 요인 차단 → 꼭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지출을 철저히 제거
 - 부정·비리 연루 보조금, 관행적 나눠먹기 사업 등 타당성·효과성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 단행
- 재정 정상화로 절감된 재원은 민생안정, 국가 경쟁력 제고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활용

3 [중점투자] 4대 중점투자 분야, 핵심 정책과제에 과감하게 투자

- ①약자복지 강화, ②미래준비 투자, ③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집중 지원
 - 사회보장성 강화, 국가 전략기술 확보, 수출·투자 뒷받침, 군 사기진작 등 핵심 정책과제에 과감히 투자

목표

민생안정,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비

기본
방향

- 건전재정 기초 견지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의 체질 개선
-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

투자
중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① 더 두터운 사회안전망
- ②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 ③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① 창의·혁신 기반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 ②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 ③ 출산·양육 부담 경감 지원
- ④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① 경제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 ②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코리아 뒷받침
- ③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①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
- ②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 ③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역할 수행

재정
정상화

일반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보조사업 정비

R&D 예산 합리화

II. '24년 예산안 전체모습

□ [총수입] 전년대비 2.2% 감소한 612.1조원 [△13.6조원]

- 국세수입은 금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3년 예산 대비 △33.1조원 감소('23년 예산 400.5 → '24년(안) 367.4조원)
-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19.5조원 증가('23년 예산 225.2 → '24년(안) 244.7조원)

□ [총지출] 전년대비 2.8% 증가한 656.9조원 [+18.2조원]

- '24년 총지출은 '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인 2.8% 증가한 656.9조원(+18.2조원)으로 편성
 - 국채발행으로 지출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 강도높은 재정 정상화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집중
 -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민간경제 활력 제고 등 민생 사업에 과감하게 재투자

< 2024년 재정운용 모습 >

(단위: 조원, %)

	'23년 예산 (A)	'24년(안) (B)	증감 (B-A)	
				%
◇ 총수입	625.7	612.1	△13.6	△2.2
· 국세 수입	400.5	367.4	△33.1	△8.3
· 국세외 수입	225.2	244.7	19.5	8.7
◇ 총지출	638.7	656.9	+18.2	2.8

□ [수지·채무]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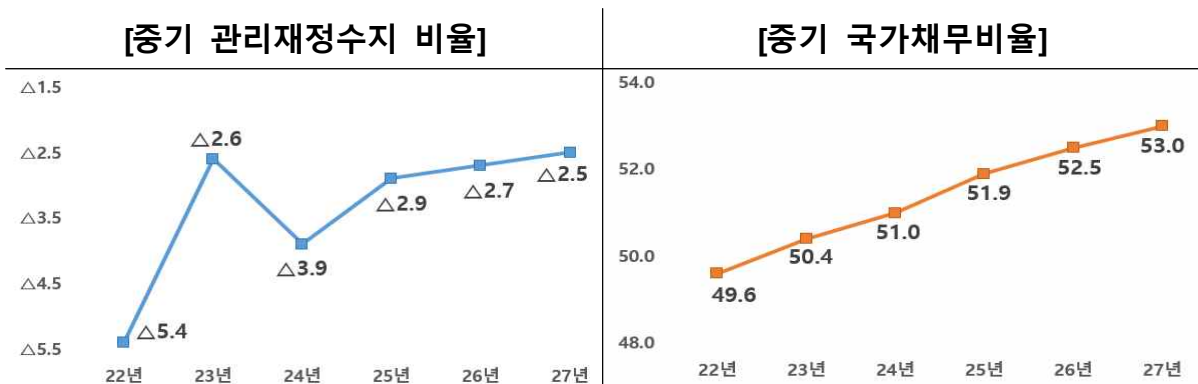
- 재정 정상화 및 지출증가율 축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재정수지·채무 악화를 최대한 억제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대비 $\Delta 1.3\%p$ 악화($\Delta 0.6 \rightarrow \Delta 1.9\%$)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Delta 1.3\%p$ 악화($\Delta 2.6 \rightarrow \Delta 3.9\%$)
 -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0.6\%p$ 증가($50.4 \rightarrow 51.0\%$)

(단위: 조원, %)

	'23년 예산 (A)	'24년(안) (B)	증감(B-A)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13.1$ ($\Delta 0.6\%$)	$\Delta 44.8$ ($\Delta 1.9\%$)	$\Delta 31.7$ ($\Delta 1.3\%p$)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Delta 58.2$ ($\Delta 2.6\%$)	$\Delta 92.0$ ($\Delta 3.9\%$)	$\Delta 33.8$ ($\Delta 1.3\%p$)
◇ 국가채무 (GDP 대비)	1,134.4 (50.4%)	1,196.2 (51.0%)	+61.8 (+0.6%p)

□ [중기계획]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

- '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Delta 3\%$ 이내에서 관리
- 국가채무 비율은 '27년 말까지 50% 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



〈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

(조원)

구 분	'23년 본예산(A)	'24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율
◆ 총지출	638.7	656.9	+18.1	2.8%
1. 보건·복지·고용	226.0	242.9	+16.9	7.5%
2. 교 육	96.3	89.7	△6.6	△6.9%
3. 문화·체육·관광	8.6	8.7	+0.1	1.5%
4. 환 경	12.2	12.6	+0.3	2.5%
5. R&D	31.1	25.9	△5.2	△16.6%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6.0	27.3	+1.3	4.9%
7. SOC	25.0	26.1	+1.1	4.6%
8. 농림·수산·식품	24.4	25.4	+1.0	4.1%
9. 국 방	57.0	59.6	+2.6	4.5%
10. 외교·통일	6.4	7.7	+1.2	19.5%
11. 공공질서·안전	22.9	24.3	+1.4	6.1%
12. 일반·지방행정	112.2	111.3	△0.9	△0.8%

Ⅲ. 재정 정상화

□ 예산 확대 과정에서 재정운용의 비효율 발생

- 예산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개별 사업 단위에서 성과 저하, 집행상 비효율 문제도 발생
 - 유사중복·집행부진·성과 미흡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낭비적 지출요인 존재
 - 부정수급 및 부당 사용 적발 등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집행상 비효율도 재정 누수요인으로 작용

< 주요 지적 사례 >

- ▶ 보조사업 연장평가시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은 폐지 또는 보조율 조정 권고
- ▶ 국회(예결위, 상임위)에서 집행부진으로 인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 의견 제시, 집행률과 집행 여건에 따라 예산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 ▶ 감사원, 국조실(공직복무관리), 기재부(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등에서 점검, 부정수급·부적정 집행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

□ 강력한 재정사업 정상화로 재정 누수요인 차단

-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 → 약 △23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단행
 - 소규모 사업이라도 철저히 점검하여 폐지·삭감하는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체질 개선에 주력
- 검토 가능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금액 조정 외에도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 개선 노력

☞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구조조정('23년 △24조원, '24년 △23조원)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 공고화를 뒷받침

< 참고: 중점 정비 분야 >

[R&D] 관행적 R&D 지원은 성과창출형 도전적 R&D로 전환

○ 그간 R&D 투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

* 정부R&D : '18년 19.7 → '19년 20.5 → '20년 24.2 → '21년 27.4 → '22년 29.8 → '23년 31.1조원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10.9%)

** 과거 4메가 D램 반도체 개발과 같은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 저조
('89년 민·관·산·학 협력으로 3년만에 양산 성공)

▪ 도전과제 대신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 난립

* R&D 사업수: ('19) 653 → ('23) 1,254개 / R&D 과제수: ('22) 7.6만개

▪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

* 연구비 중 해외재원 비중('19년) : 英 14.5%, 佛 8.1% 獨 7.4% 우리나라 1.6%

○ 나눠먹기·관행적 지원 사업 등 비효율적인 R&D는 구조 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

* 미래 글로벌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Flagship 프로젝트 추진,
첨단산업 선진기술 흡수를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투자 확대 등

[보조금]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과정이 부당한 보조사업 재정비

○ 관행적 지원 증가 등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집행·관리상 문제 등 누수요인도 다수 지적

* 보조금 예산(조원): ('18) 66.9 → ('19) 77.9 → ('20) 86.8 → ('21) 97.9 → ('22) 102.3

○ 전체 보조사업 점검을 통해 보조금 예산 합리화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외부 지적 등은 예산 편성에 반영

▪ 유사중복·집행부진·지자체 수행 사업*은 전달체계 재구조화

* (사례) 학교 스포츠·예술강사 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

▪ 부정수급·회계 관리 미흡 등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 구조조정

* (사례) 단체 대표 친족간 내부거래 집행, 정치적 강의 편성 후 강사비 지급 등

IV. 20대 핵심과제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하게 재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1.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7. 대규모·도전적 R&D로 전환
2. 중증 장애인 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8. 국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고도화
3. 천만 노인시대, 백만 노인일자리	9.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4.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10. 출산과 육아 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
5. 격차없는 다문화 가족	11. 어린이 가 걱정없이 자라나는 나라
6.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	12.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생협력 으로 극복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13. 첨단서비스 분야의 A,B,C,D	17. 군 주거·병영여건 개선
14. 세계가 즐기는 K-콘텐츠 제작·수출지원	18.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 로 국익 창출
15. 지자체+민간+지방대학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19. 면밀하게 관리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16. 농어촌 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20. 수해 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V. 중점 투자방향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①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

- ◇ 생계급여 +13.2%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지원대상 확대
- ◇ 최종증 발달장애인 돌봄 난이도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 ◇ 노인일자리 +14.7만개 확대, 수당도 6년만에 2~4만원 인상

【 저소득층 】

(17.8 → 19.4조원)

- 기초생보 급여액 인상 등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핵심 지난 5년간('17~'22) 총 인상액(+19.6만원) 보다 큰 +21.3만원 인상(4인가구 기준, +1.5조원)

- (지원금액) 4인가구 162.0→183.4만원(+21.3만원, +13.2%)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32%('15년 제도설계 이후 첫 상향), +3.9만 가구
- (제도개선)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 완화, +0.2만 가구
(다자녀·다인·도서벽지 100%→4.17%,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3.5만명, +1,260억원)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1.4만명, +518억원)

* 기본재산공제액 지역별 1.0~2.3 → 2.0~3.6억원 상향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중위 47→48%)으로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급여액 인상(쏘구간 1만원 이상, 최대 2.7만원)

- (교육급여) 급여액 11.1% 인상*으로 최저교육비 100% 수준 지원

* (초) 41.5→46.1만원(+4.6), (중) 58.9→65.4만원(+6.5), (고) 65.4→72.7만원(+7.3)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案	비고
- 생계급여	60,141	75,411	기준중위소득 인상, 선정기준 상향(30→32%)
- 의료급여	90,984	89,337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주거급여	25,723	27,424	선정기준 확대(47→48%), 기준임대료 인상
- 교육급여	1,573	1,604	교육활동지원비 11.1% 인상

○ (돌봄)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확대(+0.4조원)

- **핵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 [주간돌봄] 1단계 그룹형 1:1 **신규**(1.5천명), 2단계 개별 1:1 **신규**(0.5천명)
 [24시간돌봄] 3단계 개별 : 1개소(시범) → 17개소(전국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11.5→12.4만명) 및 발달장애 주간돌봄(1.0→1.1만명) 확대
- (장애아동) 중증 장애아 돌봄지원(月80→90시간), 발달재활(7.9→8.6만명) 확대
- (최중증 장애인) 최중증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확대(0.6→1.0만명)

○ (소득·고용) 취업성공패키지 확대(1.1→1.3만명), 조기취업수당 **신규** 도입으로 민간취업 촉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0.2만개)

- 장애인 연금 인상(月 최대 40.3→41.4만원)으로 소득보장 강화

- (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조기취업수당 신설 **신규**, 인원 확대(1.1→1.3만명)
 고용장려금 인원 확대(61.1→63.3만명), 장애인 표준사업장(147→172개소)
- (일자리) 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직접일자리 확대(3.0→3.2만개)
- (근로지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1.05→1.1만명)

○ (생활·의료)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문화접근권과 의료인프라 확충

- (생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455→558대), 시청각장애용 TV 보급(2.0→3.2만대)
 스포츠강좌 이용권 단가 인상(9.5→11만원)
- (의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12→16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22→30개소)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案	비고
- 발달장애인 지원	2,569	3,567	최중증 주간 1:1 2천명, 최중증 24시간 1:1 전국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19,919	22,846	지원대상(11.5→12.4만명), 최중증(0.6→1만명)
- 장애아동가족지원	1,757	1,940	중증 장애아돌봄(月80→90시간), 발달재활(+0.7만명)
-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330	2,480	근로지원인 지원인원 확대(1.05→1.1만명)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10	247	지원대상(1.1→1.3만명), 조기취업수당 신설
- 장애인고용장려금	2,977	3,234	지원대상 확대(61.1→63.3만명)

【 노인 】

(20.6 → 22.8조원)

- **(소득·고용)** 핵심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증가(88.3→103.0만명, +14.7만명) 및 수당을 6년만에 2~4만원 인상*(+7% 수준)
 - * (공익형) 60.8→65.4만명(+4.6만명), (민간·사회서비스형) 27.5→37.6만명(+10.1만명)
 - ** (공익형) 27→29만원(+2만원), (사회서비스형) 59.4→63.4만원(+4만원)
- 기초연금 인상(月 32.3→33.4만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뒷받침
 - *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 동시 지급 시 月62-97만원 지원 효과
- **(돌봄서비스)**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일반군 月5시간, 중점군 月16→20시간)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노인일자리	15,400	20,262	노인일자리 88.3→103.0만명(+14.7만명) 6년만에 수당 2~4만원 인상(+7% 수준)
- 기초연금	185,304	202,015	지원단가 인상(月32.3→33.4만원)
- 노인 맞춤 돌봄	5,020	5,461	신체제약 독거노인 돌봄 확대(月16→20시간)

【 소상공인 】

(3.7 → 5.1조원)

- **(경영부담)** 핵심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화와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0.9조원)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상점·공방(0.8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8만명) 지속 지원(+0.04조원)

- (자금지원) 취약차주 저금리 대환대출^{신규}(0.5조원), 영세상인 채무조정(11.5→17.8조원)
- (에너지) 고효율 냉난방기^{신규}(6.4만대), 식품매장 문닫기^{신규}(1.5만대), 수열히트펌프^{신규}(0.4만대)
- (보험료) 고용보험료 지원을 상향(최대 50→80%, 4만명), 폐업지원(3.2→3.4만명)
- (경쟁력) 스마트상점·공방(0.7→0.8만개사), e-커머스 소상공인 육성(7→8만명)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소상공인 용자	30,000	38,000	대환대출(0.5조원), 경영안정재해복구 자금(0.3조원)
- 새출발기금	2,800	7,600	영세 소상공인 전체로 대상 확대
- 전력효율향상	-	1,100	고효율 냉난방기(6.4만대), 식품매장 문닫기(1.5만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150	대상 확대(2.5→4만명), 지원을 최대 80%로 상향
- 소상공인 창업지원	312	468	스마트상점·공방(0.7→0.8만개사) 등

2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 ◇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취업지원** 등 촘촘한 지원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
-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확대 및 단가인상
- ◇ **재난적의료비** 산정방식 개편 : 질환별 개별산정 → 인별 산정

【 다문화 · 한부모 가족 】

(0.58 → 0.66조원)

- **(다문화)** ^{핵심}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업·직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취업역량 지원 강화**(+0.03조원)

- (교육활동비) 저소득가족 자녀 대상 사례관리 후 교육활동비 지원^{신규}(168억원, 6만명)
(중위 50~100% 대상, 초등: 年40만원, 중등: 年50만원, 고등: 年60만원)
- (학습지원) 기초학습지원 대상 확대(초등입학 전후→초등 전학년)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인원 확대(0.4→0.8만명,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지원)
- (취업지원) 다문화 자녀 특화 직업훈련^{신규}(200명, 폴리텍),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신규}(0.2만명)
- (모국어 학습) 다문화자녀에 이주부모 모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학습지원^{신규}(130개 센터, 0.4만명)

- **(한부모)**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확대(+3.2만명)하고,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月 +5만원)

- (한부모) ①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 60→63%, +1.9만명),
②나이와 상관없이 고교재학시까지 양육비 지원(현재 18세 미만까지 지원, +1.3만명)
③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월 20→21만원)
- (청소년한부모) 자녀가 0~1세일 경우 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월 35→40만원)

【 가족돌봄 · 고립은둔 청년 】

(0.01 → 0.02조원)

- **(가족돌봄청년)** 학습애로 및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 돌봄비*^{신규}를 지원하고, 가족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

* 청년 본인의 의료·문화·교육비 등에 사용 가능(분기별 50만원, 기준중위 100% 이하)

- **(고립은둔청년)** 심리상담, 공동거주공간 생활 지원(소통훈련, 생활관리 등), 가족간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사업 신설(청년 320명, 가족 640명 지원)

【 의료사각지대 】

[0.1 → 0.2조원]

- (재난적 의료비) 질환별 의료비 산정방식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하여 복합질환자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0.8만명)
 - * 암질환·심장질환 개별 산정 → 개인별 의료비(암+심장질환 등) 총합 기준 산정
- (의료 인프라) 핵심 소아·응급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장비 인프라 투자 확대

- (소아) 공공전문진료센터(12→14개소), 휴일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소아암거점병원(+5개소) 확충
- (응급) 닥터카(차량형 응급실) 도입^{신규}, 닥터헬기 확대(8→9대), 지역내 순환당직제 도입^{신규}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5,843	6,581	
-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125	434	저소득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6만명) 기초학습·진로지원, 대학생 멘토링 확대
-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	52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폴리텍) 이주부모 취업지원(새일센터)
- 다문화가족 소통	17	45	교류소통공간, 이주부모 모국어 학습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4,959	5,356	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 60→63%) 18세 이상 고교재학 자녀 양육비 지원 지원단가 인상(20→21만원)
○ 가족돌봄청년	53	127	자기돌봄비 지원, 사회서비스 바우처(2천명)
○ 고립은둔청년	-	24	방문학습, 심리·정서 치유, 공동생활 등 지원
○ 의료사각지대 해소	1,405	2,329	
- 재난적의료비	605	854	산정방식 개편(질환별 → 개인별 합산)
- 응급실 역량강화	237	299	의료기관 평가시 최종치료능력 평가강화
- 이동형 응급실	226	238	닥터카(육상) 도입, 닥터헬기(지상, 8→9) 확충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52	78	소아응급의료센터 확충(10→12개소) 전담전문의 인건비 지원(50~100 → 100백만원)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10	61	센터 확충(12→14개소) 및 시설·장비 지원
- 달빛어린이병원	-	47	휴일·야간진료 가능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 운영비 지원(개소당 200백만원)
- 소아암거점병원	-	64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5개소)

3 청년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 ◇ NEET, 취업준비 청년, 빈일자리 등 대상별 **청년일자리 종합지원**
- ◇ **생활체감형 청년지원** : K-pass(교통비), 산리단길 프로젝트(업무환경)
- ◇ **디딤씨앗통장은 출생시부터** 개설, 소득기준도 완화(생계·의료→주거·교육)

【 청년의 미래 지원 】

[12.0 → 14.6조원]

○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UP 패키지(+0.5조원)

- (NEET 청년) 발굴·심리상담·교육·온보딩 종합지원 플랫폼 **신규** (10개소)과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신규** (6천명)
- (구직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첨단분야·해외취업 지원 확대(+0.5조원)

- (대학일자리+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본격 시행, 직업계고까지 확대(3→17만명)
- (취업준비)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경감 **신규** (56만명), 일경험 지원(2.6→4.2만명)
- (첨단분야) 하이테크 훈련(3.6→4.4만명, +569억원) · (해외취업) 한미 첨단분야 교류 **신규** (300명, 61억원)

- (빈일자리) 10개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장려금* 지급 **신규**

*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

○ (교육·생활) 저소득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핵심 대중교통요금 할인을 받는 'K-pass' 도입 **신규** (177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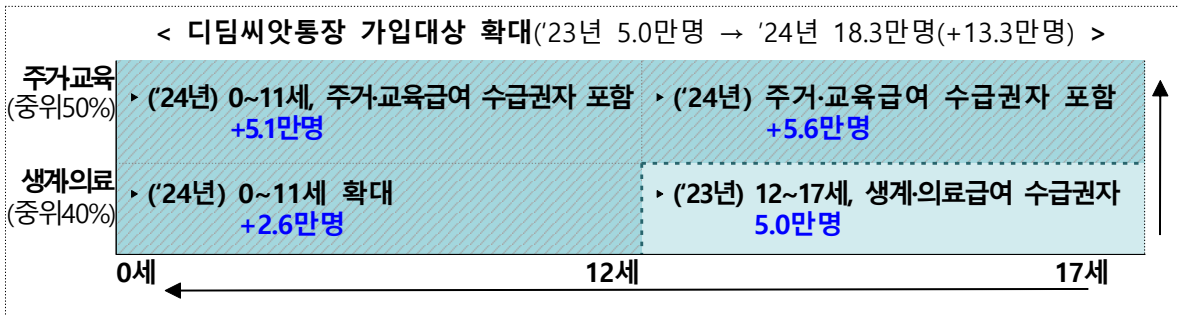
- (장학금)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확대(기초·차상위: 전액지원, 저소득층: +30~50만원)
- (생활비) 대학생 생활비 대출한도 인상(350→400만원), 천원의 아침밥 확대(234→397만명)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20~53%)받는 'K-Pass' 도입 **신규** (177만명)

○ (주거환경) 청년 공공분양·임대물량 대폭 확대, **핵심** 산업단지를 청년선호 환경으로 조성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 추진(+2.0조원)

- (주거) 청년 공공분양(5.3→6.7만호), 청년 공공임대(5.2→5.7만호)
- (환경) 산단환경개선펀드(기숙사형오피스텔, 편의시설 등 조성) 확대(0.1→0.2조원)
청년복합문화센터(100개), 아름다운거리(60개), 공장환경개선 **신규** (150개社)

- **(저소득아동)** 핵심 모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자립준비를 위해 출생시부터 17세까지 디딤씨앗통장 가입 지원

* (가입연령) 12~17세→0~17세, (소득요건)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권자 : **5.0→18.3만명**



- **(근로유인)**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6.6→6.9만명)하고, 청년에 대한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만 24→29세이하, 1.2만명 수혜)

* 소득인정액 산정시 근로소득은 4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당을 인상하고(月40→50만원), 전담인력·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 자립지원 전담인력(180→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2,000명→2,750명)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청년 지원	119,800	145,628	
- 희망·UP 패키지	8,931	14,531	일경험 +2.2만명(NEET 맞춤형 일경험 0.6만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56만명)
- 교육·생활 부문	48,887	51,077	국가장학금 지원, 대중교통 요금 할인(K-pass)
- 주거·환경 부문	50,495	70,507	청년 공공분양·임대(10.5→12.4만호), 산단환경개선펀드 2배 확대(958→1,868억원)
○ 취약계층 자립역량	8,019	9,595	
- 디딤씨앗통장	499	1,267	만 12~17세→0~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
- 자활사업	6,936	7,484	자활근로 6.6→6.9만명
-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	212	청년특례 연령 확대(만24→29세 이하)
- 자립준비청년	585	631	자립수당 인상(月40→50만원), 맞춤형 사례관리 2,000→2,750명 확대

['24년 달라지는 모습]

과 제	주요 프로그램	'23년	'24년
저소득층	생계급여액(4인가구)	월 162.0만원	월 183.4만원
	수급선정기준(중위소득)	생계30%, 주거47%	생계32%, 주거48%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장애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단계별 1:1 돌봄 주간	1개소(시범) -	전국확대(17개소) 2천명
	활동지원서비스	11.5만명	12.4만명
	취업성공패키지	1.1만명	1.3만명
노인	노인일자리 수	88.3만명	103.0만명
	노인일자리 수당(공익형)	월 27만원	월 29만원
다문화·한부모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6만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0.2만명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	중위 60% 이하	중위 63% 이하
청년	NEET청년 플랫폼	-	10개소
	자격시험응시료(△50% 감면)	-	56만명
	K-Hightech Training	3.6만명	4.4만명
	빈일자리 장려금	-	2.4만명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958억원	1,868억원
	디딤씨앗통장 가입요건	12~17세, 생계·의료급여	0~17세, 주거·교육급여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	금리 11→4%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105개사	210개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5만명, 최대50%	4만명, 최대80%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1]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산업·기술 경쟁력 확보

- ◇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
- ◇ **국가첨단전략산업** 성장동력 뒷받침을 위한 **인프라·금융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

(4.7 → 5.0조원)

- **(전략기술 투자)**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차세대 혁신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여 **첨단 주력산업의 성장** 견인

- (AI)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신규}, 생성AI선도인재양성^{신규} 등 (7,051→7,371억원)
- (첨단바이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연구중심병원육성 등 (8,288→9,626억원)
- (양자) 양자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 양자팍 공정기술 고도화기반 구축^{신규} 등 (1,080→1,252억원)

- **(Flagship)** ^{핵심}바이오,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주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Flagship)** 추진

- (KARPA-H 프로젝트) 바이오 분야 자율적 의사결정 통한 도전적·혁신적 연구^{신규}(495억원)
- (우주산업 클러스터)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신규}(100억원)
- (초격차 프로젝트) 반도체 첨단패키징,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신규}(600억원)

- **(국제협력)**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 지원 등 성과창출형 사업 확대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신규}(864억원) : 의료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 기술(미국) 융합·활용

현행(AS IS)	개편(TO 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 연구 ○ 단가·소규모 국제협력으로 기술유입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석학·기업 전략적 국제협력 확대 ○ 해외 우수 대학·연구소에 협력거점 구축

- **(신진연구자)**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의 연구 정착과 발전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국외연수기회** 확대

* (임용전 연수) 600 → 1,116개, (연구실 초기정착 지원) 200개(최대 5억원), (신진연구지원) 450 → 800개 사업(연구비 年 1.5→3억원)

【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핵심 】

(1.6 → 2.0조원)

- **(금융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중견·중소기업(특화단지 입주기업 우선)에 대해 기술 실증·상용화 촉진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 신규(0.1조원)
 - 기존 ‘나눠먹기식’ 소액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에 집중 지원
- **(인프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수·전력·도로·폐수 등 핵심 기반시설 지원 신규(+0.02조원)
 - * 투자규모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의 5~30% 국고 지원
- **(인력양성)**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 기업과 대학이 협업하여 산업현장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0.28조원)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핵심전략기술 R&D	46,940	49,867	
- AI	7,051	7,371	차세대 생성 AI 기술개발 등
- 첨단바이오	8,288	9,626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 양자	1,080	1,252	양자컴퓨팅 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 사이버보안	1,653	1,892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 블록체인 고도화 등
(Flagship 프로젝트)	-	1,395	※ 핵심전략기술 R&D 內
• KARPA-H 프로젝트	-	495	바이오분야 도전적·혁신적 연구
• 우주산업 클러스터	-	100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15,962	19,894	
- 첨단 기술혁신 융자	-	1,000	기술 실증 및 상용화 자금 지원
- 특화단지 기반시설	-	154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지원
- 첨단인재 양성	15,962	18,740	특성화대학(8→21개교),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2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 ◇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 中企·소상공인 에너지 효율 지원
- ◇ 자원 공급망 안정화, 원전 활성화, 新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안보 강화

【 에너지 약자보호 】

[0.8 → 1.3조원]

- (냉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최소화(0.2→0.7조원)
- * [대상] ('23) 생계·의료급여 기후민감(85.7만가구) → ('24) 기초생보 기후민감(115.0만가구)
[단가] ('23) 19.5만원(冬 15.2 + 夏 4.3) → ('24) 36.7만원(冬 31.4 + 夏 5.3)
- (생활환경) 주거공간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단열시공·냉난방 시설 교체(5.4만가구) 및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 확대(14.8만건)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案	비고
- 에너지바우처	1,909	6,856	대상(85.7→115.0만가구), 단가(19.5→36.7만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910	1,083	고효율냉난방기기 보급 확대(4.5→5.4만 가구)
-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	-	314	17개소 대상 지원(24~28년간 총 75개소)

【 에너지 사용 효율화 】

[0.6 → 0.8조원]

-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진단 지원을 확대(800→1,000개소)하고, 고효율 설비 보급(300→390건)·용자(0.30→0.33조원) 지원 확대
- (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4.9만개) 및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1.5만개) 지원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0.1조원)
- (일반가구) 자발적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 지원범위* 및 지원 물량(250→260만가구) 확대(120→143억원)

* (현행) 전년대비 감축시 지원 → (개선) 참여자 평균보다 추가 감축시에도 지원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案	비고
- 에너지절약시설설치용자	2,633	2,946	용자 공급규모 확대(2,962→3,300억원)
- 에너지효율향상시장 조성	170	231	중기,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보급
- 탄소포인트제 운영	120	143	지원대상 확대(250→260만 가구) 등

【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

(2.4 → 2.7조원)

○ **(공급망 안정화)** 핵심 핵심자원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여 주요광물·석유 등의 공공비축을 획기적으로 확대(+0.2조원)

▪ 국내유전·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용자 강화(+0.23조원)

- (공공비축) 핵심광물 비축 확대(리튬 +24일분, 희토류 +1년분 등)
- (수입선다변화) 국내외 유전개발사업 출자비율(최대 40→50%),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사업 지원비율(최대 30→50%) 상향

○ **(원전 생태계)** 생태계 조기복원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저리용자·보증지원 신설, 수출·인력 지원 강화(+0.1조원)

- (금융지원) 원전분야 저리용자^{신규}(1,000억원), 원전수출 특별보증^{신규}(1,250억원)
- (수출지원) 원전산업 거점무역관 확대(10→16개), 해외전시회 참가(20→40개사)
- (인력지원) 원전기업 재직자·퇴직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 확대(230→420명)

○ **(에너지신산업)**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

- (수소)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4개소),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조성(1개소)
- (재생) 신재생 핵심기술 R&D(2,737→3,187억원), 동해가스전 활용 해상풍력 기지 구축(1개소)
- (CCUS) 화력발전소, 화학산단 등 인근 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센터 구축지원(3개소)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기존에너지원 확보	3,416	5,586	
- 광해광업공단 출자	372	2,331	리튬 +24일분, 희토류 +1년분, 갈륨 +60일분
- 유전개발사업 출자	301	481	정부 출자비율 상향(최대 40→50%)
- 해외자원개발특별용자	364	398	용자지원 비율 상향(최대 30→50%)
○ 원전 활성화	5,318	6,622	
- 원전생태계 금융지원	-	1,000	저리용자 1,000억원 공급(평균 10억원×100개社)
- 원전수출 특별보증	-	250	수출보증보험 1,250억원 공급(보증배수 5배)
- 원전생태계지원사업	89	112	역량교육(230→420명), 해외전시회참가(20→40개社)
○ 에너지신산업 육성	15,203	14,792	
- 수소생산기지 구축	88	81	수전해시설 4개소, 탄소포집형 1개소 구축
- 해외청정암모니아생산 지원	40	60	그린수소·블루수소 프로젝트 지원(각 30억원)
- 탄소포집활용실증센터구축	37	89	화학전환 실증(1개소), 생물전환 실증(1개소)

3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전주기 지원

- ◇ 출산가구의 주택 구입·전세 용자 소득요건 완화 + 분양·임대 지원
- ◇ '95년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 급여 기간 연장(최대 12→18개월)
- ◇ 부모급여 확대(0세 70→100만원, 1세 35→50만원)

【 출산가구 주거안정 핵심 】

(6.9 → 9.0조원)

-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출산 가구(출산 2년 내, '23년 이후 출생아)에 주택 구입·전세자금 용자 및 주택 우선공급 지원(+2.1조원)
 - (주거자금)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 대폭 완화(年 7천만원→1.3억원)
 - * ① 디딤돌(구매): (주택가액) 6→9억원 이하, (한도) 4→5억원, (금리) 시중대비 △1~3%p(5년간)
 - ② 버팀목(전세): (보증금) 4→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금리) 시중대비 △1~3%p(4년간)
 - (주택공급)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분양) 신설,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마련

【 일·육아 병행 】

(1.8 → 2.2조원)

- (육아휴직) 핵심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기간 연장*(+6개월), 영아기 맞돌봄 특례의 기간·급여 확대(3→6개월, 상한 300→450만원)(+0.3조원)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부모 각각 6개월 연장(12→18개월)
- (육아기 근로단축) 자녀연령·급여·사용기간 대폭 확대(+0.05조원)
 - * (자녀연령) 8→12세, (급여) 주 5→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 최대 24→36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 확대(5일→10일, +13억원)
- (활용여건 개선) 유연근무제 확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 등 일·육아 병행제도의 실질적 현장활용 여건 조성(+92억원)
 - (유연근무) 영세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사용시 월 20만원 장려금 지원^{신규}(10억원)
 - (대체근로) 육아기 단축시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신규}(월20만원, 24억원), 대체인력뱅크 확충(3→5개)

【 양육비 부담 경감 핵심 】

(1.9 → 2.7조원)

- **(부모급여)** 초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한 부모급여 지급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0.7조원)
 - * '23→'24년: (만0세) 월70→100만원, (만1세) 월35→50만원
- **(다자녀 첫만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300만원으로 확대(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610억원)

【 보육 인프라 확충 핵심 】

(3.4 → 3.7조원)

- **(보육서비스)**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 추가(미달 1명당 62.9~23.2만원) 지원(+0.2조원)
 - * 현원 50% 이상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 2.1만개, 정원미달 2.6만명 대상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5% 인상(물가상승률 전망 2배 이상)
- **(틈새돌봄)** 맞벌이 부부 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틈새돌봄 확대
 -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2배 이상 확대(1,030→2,315개소)
 -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8.5→ 11.0만 가구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자부담 비용)을 10% 할인하여 부담 완화

【 난임가구 출산지원 】

(0.01 → 0.03조원)

- **(난임지원)** 임신·출산 희망가구에 난임 검진·시술 등 신규 지원
 - (사전검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10만원, 1회) 지원 신규(63억원)
 - (난임시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6억원)
 - (난임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 신규(37억원)
- **(건강관리)**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폐지(기존 중위 180%) 및 지원기간 연장(16→24개월)
 - *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1.3→3.5만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0.8→1.2만명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출산가구 주거안정	68,880	89,732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68,231	86,876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소득요건 상향, 분양임대 우선공급 지원
- 이차보전 지원	649	2,856	
○일-육아병행	17,985	21,534	
- 육아휴직급여	16,964	19,869	육아휴직(일반) 기간연장 12→18개월, 영아기 특례 3→6개월 및 상한 300→450만원
- 육아기단축급여	937	1,490	자녀연령 8→12세, 급여 100% 주 5→10시간, 사용기간 최대 24→36개월
- 배우자출산휴가급여	71	84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5→10일
- 출퇴근기록관리시스템	-	20	시차출퇴근 확산 위해 시스템 보급(800개)
- 육아기단축 업무분담지원금	-	24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업무대행자에게 수당 지급시 월 20만원 지원(0.6만명)
- 대체인력뱅크 등	14	48	대체인력뱅크 2→5개소, 영세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0.2만명) 등
○양육비 부담 경감	19,409	27,083	
- 부모급여	16,215	23,279	0세 70→100만원, 1세 35→50만원 * 보육료 지급액 5,608억원 제외
- 첫만남이용권	3,194	3,803	둘째 이상 자녀 200→300만원
○보육 인프라 확충	34,001	37,267	
- 영유아보육료	30,251	31,543	0~2세, 장애아보육료 5% 인상 * 부모급여 이관분 5,608억원 포함
- 영아반 인센티브	-	796	정원미달 0~2세반(현원 50%)에 정원대비 부족인원만큼 추가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3,546	4,679	8.5→11.0만 가구, 다자녀 10% 할인
- 시간제 보육	204	250	독립반 830→850개, 통합반 200→1,465개
○난임가구 출산지원	119	287	
- 임신전 건강관리	-	63	임신 준비중인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16.4만명
-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	6	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28	68	소득기준 폐지(現 중위 180%)
- 미숙아 등 의료비	23	39	* (지원대상) 고위험임산부 1.3→3.3만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0.8→1.2만명, 난청 100→278명
- 선천성 난청 검사지원	3	6	
- 생애초기 건강관리	51	54	가정방문을 통해 신생아 발달평가, 모자건강 상담 지원 보건소 확대(60→75개소)
- 난임·출산 우울증 상담센터	14	17	난임·출산 우울증 심리·정서 지원(8→10개소)
- 난임휴가 급여	-	37	중소기업 근로자에 난임치료유급휴가 2일

4 첨단인재 양성과 합리적 노동시장 조성

-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적극 양성
-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해외인력 유치**로 인력난 해소

【 첨단인재 양성 】

[1.6 → 1.9조원]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미래 첨단분야 핵심인재 양성
 - (반도체) 특성화 대학, 기업·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부트캠프,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대상 **BK21 지원대학 확대**(+0.1조원)
 - (특성화대학) ('23) 8개교(수도권 3, 지방 5) → ('24) 10개교 신규(수도권 7, 지방 3)
 - (부트캠프) ('23) 10개교(수도권 7, 지방 3) → ('24) 신규 17개교
 - (두뇌한국 21) ('23) 10개교(수도권 7, 지방 3) → ('24) 신규 3개교
 - (첨단분야) 대학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와 이차전지 특성화 대학 신설 등 핵심인재 양성 지원 확대(+0.2조원)
 - (혁신융합대학)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규 5개 분야(13→18개 분야)
 - (계약학과) ('23) 반도체 대학원 3개교 → ('24) 첨단분야 대학원 3개교 추가(총 6개교)
 - (부트캠프) 이차전지(4개), 차세대 디스플레이(4개), 바이오헬스(4개), 항공우주(3개) 등 4개 첨단분야, 15개교(3,000명) 단기 교육과정 신설

【 노동시장 합리화 핵심 】

[0.3 → 0.5조원]

- (이중구조 개선) 「대기업·정규직 - 하청·비정규직」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직무성과 임금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안전투자 지원
 - (직무성과 임금개편) 업종(3개)·사업장별(150개소) 특화 임금체계컨설팅 **신규**
 - (상생협력)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규**(100억원) → 타업종·지역 확산지원(189억원)
원하청 공동복지기금(1차협력사, 10→20억원)·상생연대기금 **신규**(2·3차협력사, 50억원)
 - (안전투자) 위험공정교체 지원업종(뿌리·고위험 3→6대업종)·대상기업 확대(0.2→0.4만개소)
- (근로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인프라 확대
 -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 **신규**(주 2시간 이상 단축 중소·중견기업, 167개사, 월 30만원)
 - (인프라·컨설팅) 출퇴근 기록·관리시스템 **신규**(800개), 장시간근로개선컨설팅(250→700건)

- (외국인력 도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원활히 지원하고 외국인 직무훈련 강화로 국내 조기정착 지원

- (인력도입) 숙련 외국인력 비자쿼터 확대(+3만명)를 감안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확대(49.5→62.2만명)
- (조기정착) 비숙련 외국인력(E-9) 직무훈련^{신규}(0.4만명),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신규}(0.1만명)

- (창업지원) 원스톱 창업지원센터를 신규 개설(+15억원)하고, 해외 유망기업의 발굴·국내 정착 지원(K-스카우터, 4개사)

- (해외인재 유치) 개도국 인재의 학위과정 확대(+1,300명) 및 한국 교육원을 통한 유학생 유치 강화

* 정부초청장학생(4,906→6,700명), KDI장학생(90→100명), 한국교육원(188→301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첨단인재 양성	15,962	18,740	
- 반도체 분야	4,071	5,190	특성화대학(8→18교), 부트캠프(10→27교)
- 이차전지 등 첨단분야	11,891	13,550	혁신융합대학(13→18개), 계약학과 대학원(3개 신규)
○노동시장 합리화	3,004	4,914	
- 임금체계 컨설팅	-	75	업종별 특화컨설팅(3개), 직무능력표준 활용(150개)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356	694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타업종 확산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135	222	상생협약 대기업 출연분 정부매칭 확대(10→20억원)
- 상생연대 형성지원	-	50	상생연대기금 매칭지원(3개업종)
- 위험공정 교체지원	2,229	3,220	지원업종(3→6개) 대상기업(0.2→0.4만개소) 확대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108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167개사, 월30만원)
- 장시간근로개선컨설팅	19	57	컨설팅 물량 확대(250→700건)
○해외인력 유치	1,034	1,637	
- 외국인등록증발급	47	57	등록증 발급인원(49.5→62.2만명)
- E-9 특화훈련	-	162	E-9 특화훈련 0.4만명, 공동훈련센터 5개소
- 외국인 일학습병행	-	124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0.1만명)
- 해외인재유치(학위과정)	987	1,294	정부초청장학생(+1,794명), KDI장학생(+10명)

['24년 달라지는 모습]

과 제	주요 프로그램	'23년	'24년
국가전략 기술	Flagship 프로젝트	-	0.1조 원
	국제협력 R&D	0.5조 원	1.8조 원
첨단산업 투자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누적 2개소 (평택·용인)	누적 3개소 (포항 추가)
	첨단 기술혁신 융자	-	0.1조 원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19.7만원	36.7만원
	소상공인 냉·난방기기 교체	2.9만대	6.4만대
	핵심광물 비축 물량	평균 42일분	평균 60일분
저출산 극복	육아휴직 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부모급여 지원	0세70/1세35만원	0세100/1세50만원
	영아반 정원기준 보육료	-	23.2~62.9만원
	주택용자시 소득요건(年)	7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필수 가임력 검진	-	5~10만원
인재양성	반도체 특성화대학	8개교	18개교
	첨단산업 부트캠프	10개교	42개교
노동시장 합리화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	3개 업종 150개 사업장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	月 30만원
	외국인력(E-9) 직무훈련	-	0.4만명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경제 재도약을 위한 투자 활성화

- ◇ 해외·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
- ◇ 고부가가치 첨단 서비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 확대

【 첨단 서비스 산업 (A·B·C·D) 고도화 핵심 】 (3.6 → 4.4조원)

- (AI) 민간 중심의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AI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0.2조원)

- (산업융합)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신규}(619억원), AI반도체 데이터센터^{신규}(75억원)
- (초거대AI) 5대분야(법률·의료·학술·미디어·심리)와 AI 접목 서비스 개발^{신규}(383억원)

- (Bio) 바이오 난제 해결·의료기술 확보 등을 위한 「KARPA-H 프로젝트*」^{신규}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신규} 추진(+0.1조원)

* (KARPA-H) 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방식인 美 DARPA형 벤치마킹

** (보스턴코리아) 의료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기술(미국) 융합으로 핵심의료기술 확보

- (Cyber 보안) 민간자본 활용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사이버보안 펀드’^{신규}를 조성하고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확대(+0.05조원)

- (Digital 플랫폼정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체감 신규서비스 제공(+0.5조원)

· (국민·체감) 정부24, 홈텍스, 고용24 등 6대 행정서비스 1회 로그인(344억원),

· (기업·서비스창출) 민간앱에 디지털서비스 개방확대(23→40종),
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입지 사전 컨설팅 플랫폼 구축^{신규}(63억원)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案	비고
○ 인공지능	10,384	12,028	
- AI 플래그십 프로젝트	-	383	AI기반 법률·의료·학술·미디어·심리 서비스 개발
- AI반도체데이터센터고도화	-	75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인프라 성능개선
○ 바이오	18,654	19,442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302	2,889	신약, 줄기세포 등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
-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	864	데이터(한국)-첨단바이오기술(미국) 융합·활용
○ 사이버 보안	3,117	3,656	
- 사이버보안펀드	-	200	유망 보안 스타트업 대상 정부 주도 펀드 조성
- 융합보안핵심인재양성	68	88	융합보안 교육과정 개발 및 전용 실습장 구축
○ 디지털플랫폼정부	4,192	9,262	
-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30	344	6대 행정서비스 1회 로그인으로 통합 이용 등
- 공장설립인허가플랫폼	-	63	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입지 사전 컨설팅 플랫폼

【 투자 촉진 】

(0.3 → 0.6조원)

- (해외투자 유치)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500→2,000억원) 및 유턴 투자(570→1,000억원) 보조금 지원규모 대폭 확대
 -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외국인·유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 확대
- (지방투자 지원) 국내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규모 확대 및 국비 지원한도 확대(기업당 100→200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500	2,000	국가첨단전략기술 최대 40→50% 지원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570	1,000	국가첨단전략기술 최대 50% 지원(現 29%수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32	2,127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 확대(100→200억원)

【 문화산업 투자 확대 】

(1.2 → 1.5조원)

- (콘텐츠) 핵심 K-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을 '23년 대비 2배 이상 확대(0.8 → 1.8조원)
 - 글로벌 OTT 공세 대응 K-콘텐츠 전략펀드 신규 조성(0.6조원)
 - 대형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기술* 인프라 구축(250억원, ~'25년)
- * (예시) 차세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LED, 시각 특수효과(VFX) 활용 촬영
- (관광) 「'23~'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해외관광객 유치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 (인프라) 광역권 관광개발(서부 181억원, 충청유교 232억원, 남부권 278억원)
- (관광) 한국방문의 해 행사(100→178억원), 디지털 관광주민증^{신규}(15→40개 지역)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K-콘텐츠 정책금융	2,220	4,260	펀드 3,950, 완성보증 250, 이차보전 60
- 버추얼프로덕션스튜디오	-	125	국내 최대 규모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 한국방문의 해 지원	100	178	K-컬처 활용 이벤트 개최 통한 방한 유도
- 광역권 관광개발	608	690	서부·충청유교·남부권 관광개발 지원

2 수출 드라이브 및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 ◇ 수출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기조 본격화**
- ◇ 국내기업 해외진출, 해외유망기업 발굴·육성 등 **글로벌 창업지원 강화**

【 수출 드라이브 】

(1.5 → 1.9조원)

- **(수주 프로젝트)**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1.3조원 추가 공급, 정보제공·자금지원 기능 보장

- (원전) 거점무역관 확대(10→16개소), 입찰컨설팅(20→40개사)
- (방산) 선도무역관 확대(20→31개소), 무기개조 및 해외바이어 발굴(814→818억원)
- (플랜트) 플랜트 수주지원센터(7→11개소), 글로벌 PIS펀드 조성^{신규}(27년까지 1.1조원)
- (자금지원) 원전 수출보증보험^{신규}(0.1조원), 조선업 RG 특례보증^{신규}(0.2조원)
수은 고위험국 특별계정(0.3조원) 무보 대규모프로젝트(0.7조원) 중장기 보증

- **(해외시장 개척)** 콘텐츠·농식품 등 유망산업 맞춤형 해외 진출

-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15→25개), 해외 콘텐츠기업 지원센터^{신규}(LA, 동경)
- (농식품) 농수산물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확대(498→1,059개사)
- (바이오) 글로벌 바이오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신규}(77억원)

- **(마케팅 지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바우처(3,473→3,984개사), 해외전시회(기업수 5,478→5,646개사, 단가 12.6→15.1백만원) 지원 확대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수주프로젝트 지원	2,669	5,326	
- 무역보험기금 출연	500	950	조선 RG보증 400억원 대규모프로젝트 550억원
- 방산 수출지원	814	818	무기개조 및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확대
-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99	526	글로벌 PIS 펀드 신규 조성(~27년 1.1조원)
○ 해외시장 개척	3,882	4,500	
- 콘텐츠 수출기반 조성	544	794	거점센터 15→25개, 한류박람회 1→2회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875	946	농식품 수출바우처 43→325개사
- 제약바이오 시장진출	6	83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
○ 마케팅 지원	8,398	9,557	
- 수출바우처	1,441	1,679	일반 241→444개사, 중소 2,982→3,290개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29	3,213	수출시장 다변화, 분야별 상담회 지원 강화

○ **(글로벌 진출)** 글로벌 TIPS 신설(20개사),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조성 등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창업 지원 강화

- **(해외창업)** 해외창업사업화자금 지원^{신규}(20개사), CES 등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확대(3→4개)
- **(자금지원)** 해외창업, M&A 등 글로벌 진출 지원(스타트업코리아펀드)^{신규}(1,500억원)

○ **(국내안착)** 한국형 스테이션F*를 조성(1개소)하여 청년·스타트업·투자자가 교류하는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민간주도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개방성·자율성·다양성이 특징

- **(발굴·성장)** 해외 유망기업 발굴·정착 지원(K-스카우터) 글로벌협업 지원(270→287개사)
- **(K-그랜드챌린지)** 외국인 창업경진대회 우승 창업가에게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1→1.5억원)
- **(한국형 스테이션F)** 민간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청년창업가 업무 공간 조성^{신규}(1개소)

○ **(지역창업)** 지자체 선정 지역스타기업 보증, 중앙·지자체·민간 공동펀드 조성 등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 지원

- **(유니콘기업육성)** 지자체 선정 예비유니콘기업 등 보증지원(기업당 최대 200억원)
- **(자금지원)** 중앙·지자체·민간 공동펀드 조성('26년까지 1조원), 엔젤투자 허브(3→4개소)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글로벌 진출	171	1,696	
- 스타트업코리아펀드	-	1,500	4년간('24~'27) 2조원 규모의 자펀드 신규조성
- 글로벌스타트업페스티벌	12	16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참여지원 확대(3→4개)
○ 국내안착 지원	2,350	2,840	
- 글로벌기업협업지원	405	430	구글 등 글로벌기업 협업 지원(270→287개사)
- TIPS기업 사업화지원	1,100	1,303	TIPS 기업 사업화마케팅 자금지원(720→830개사)
- 재도약지원 용자	750	1,000	사업전환, 재창업 등 자금지원(1,360→1,680개사)
○ 지역벤처·창업 지원	343	614	
- 유니콘기업 육성(기보)	-	200	예비유니콘 보증 2,500억원 공급(보증배수 12.5배)
- 지역엔젤투자허브	12	14	지역엔젤투자허브 신규 개소(3→4개소)

3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 ‘지자체 + 민간 +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체계 구축
- ◇ 농어촌을 살리는 직불금 3조원 시대 개막 및 청년농 맞춤형 지원

【 지역투자 활성화 핵심 】

(4.5 → 5.7조원)

	Before	After
지역활성화펀드	정부주도 소규모 투자	민간활용 대규모 투자
생활인구 확충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확보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확보
지역중심대학	중앙정부 주도 지원	지자체 주도 지원

- (민간연계 투자)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신규 (모펀드 3,000억원 조성)
 - 민간의 풍부한 자금·역량을 활용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年 3조원 수준의 투자 유치
 - * (예시)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 (생활인구 확충) 지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지원 신규 (9개 시·도, 135억원)
 - 지자체가 빈집·폐교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부처와 협약 체결 시, 3년간 50억원(개당) 지원
 - * (예) 워케이션센터(공유오피스 + 숙소), 세컨드하우스, 양봉 등 취미형 창업연계시설
- (지역자율 투자) 지자체 스스로 편성하는 균특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확대(+0.8조원)하고, 지자체 자율형 디지털전환 프로젝트 지원 신규

- (포괄보조사업)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171억원), 벽지노선(+39억원)
- (디지털전환)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 디지털신산업 육성 신규 (71억원)
 (예) AI를 활용한 도로결빙 교통사고 예측, 데이터 기반 농기계 안전관리

○ (대학혁신) 지역주도·상향식·성과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0.3조원)

▪ (지역주도) 대학에 대한 재정권한을 지자체로 부여(RISE)*, 30개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선정하고 집중 지원

* RIS(지역혁신) 등 7개 사업 통합, ** '23~'26년간 총 30개 대학 선정, 교당 1,000억원 지원

▪ (상향식) 교육부 주도 대학역량평가를 대학 협의체 주도로 전환, 사립대 자발적 구조개선 경영자문 확대*, 학사제도 자율개편 지원**

* 사립대학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30개교, 53억원 지원)

** 자율학사제도 모델 개발 위한 대학 학사자율역량 기반조성^{신규}(5억원)

▪ (성과중심) 대학 재정지원시 성과배분 비율 확대

* 대학혁신지원(30→36%),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 활성화(40→60%)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지역투자	24,550	33,555	
- 민간연계 투자 (지역활성화 펀드)	-	1,000	모펀드 3,000억원 조성 (국가, 지방(지방소멸기금), 민간 각 1천억원)
- 생활인구 확충	-	135	9개 시·도에 3년간 총 50억원씩 지원
- 지역자율 투자	24,550	32,420	노후상수도정비, 성장촉진지역개발
○ 대학혁신	20,658	23,784	
-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13,590	14,949	성과배분 지급비율 확대 (30→36%)
- 국립대 육성사업	4,568	5,710	성과배분 지급비율 확대 (40→60%)
- 지방(전문대) 활성화	2,500	3,125	성과배분 지급비율 확대 (40→60%)

- **(직불금)** 핵심 농어민 경영안정, 청년농 유입 촉진, 쌀 적정생산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불예산을 3조원으로 확대(2.8→3.1조원)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 상향(120→130만원), 청년농 정착지원금 지원인원 확대(신규 4→5천명), 고령농 은퇴직불금(6백만원/ha) 신설 등
 - (경영안정) 소규모 농어가 직불 단가 상향(120→ 130만원 +568억원), 수입보장보험 확대(7→10개)
 - (세대전환) 청년농 육성 위한 정착지원금 확대(신규 4→5천명), 고령농 은퇴직불^{신규} 도입(+126억원)
 - (식량수급) 쌀 적정생산 및 밀콩 등 전략작물 생산 촉진을 위해 전략직불 확대(+744억원)
 - (탄소중립)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직불제^{신규} 도입(90억원)

- **(청년농)** 핵심 농촌에 새로운 활력 유입을 위해 청년농의 단계별 (진입 → 정착 → 성장) 맞춤형 지원 확대(1.0→ 1.5조원)
 - (진입) 청년농 농지지원 2배 확대(1,875→ 3,500ha), 어선청년임대(10→25척), 임대형 양식장^{신규}(10개소),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신규}(2개소, 300억원)
 - (정착)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 조성(신규 4→8개소), 농번기 아이돌봄 확대(74→100개소)
 - (성장) 농식품 엑셀러레이터 확대(4→8개),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신규}(75억원)

- **(정주여건 개선)** 쾌적한 생활권 조성, 테마관광 육성 등 농촌 매력을 제고하고 농촌일손 지원, 농어업인 건강권 등 강화
 - (생활환경) 어촌신활력 확대(+518억원), 빈집 활용 지역특화사업^{신규}(50억원)
 - (테마관광) 민간주도 테마형 농촌관광 프로그램^{신규}(20개), 농촌매력 확산 지원(10억원)
 - (농촌일손)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19→70개소), 농어촌 근로자 기숙사 건립(신규 13개소)
 - (건강권) 여성농어업인 특수검진 확대(1.0→4.6만명), 농촌의료 왕진버스운영^{신규}(32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고령농 은퇴직불	-	126	농지매도 600만원/ha 선임대후매도 480만원/ha(10년)
- 전략작물직불	1,121	1,865	논콩, 가루쌀 2배 상향(100→200만원/ha)
- 맞춤형 농지지원	8,577	12,413	청년농 농지지원 2배 확대(1,875→3,500ha)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48	152	청년농 보금자리 주택 조성(신규 4→8개소)
- 빈집 활용 지역특화사업	-	50	지역 빈집을 농촌살아보기 체험장 등으로 활용
- 여성농어업인특수건강검진	24	61	여성농어업인 특수검진 확대(1.0→4.6만명)
- 농촌휴양서비스산업육성	-	57	농촌 테마형 관광프로그램 20개 운영

['24년 달라지는 모습]

과 제	주요 프로그램	'23년	'24년
투자유치	첨단전략기술 외투·유턴보조금	최대 40%	최대 50%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업당 국비 지원한도	100억원	200억원
첨단서비스 (ABCD) 고도화	전문분야 AI활용 서비스	-	5개 분야 (법률, 의료 등)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28명	101명
	사이버보안 전용펀드	-	200억원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23종	40종
문화산업	콘텐츠 정책금융 확대	0.8조원	1.8조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15개 시군	40개 시군
수출 드라이브	수출바우처 지원기업	3,473개사	3,984개사
	해외전시회 지원 단가	12.6백만원	15.1백만원
	원전·방산·플랜트 거점무역관	37개소	58개소
스타트업 코리아	글로벌기업협업프로그램	270개사	287개사
	TIPS 기업지원	720개사	830개사
	지역엔젤투자허브	3개소	4개소
지방시대	생활인구 확충 프로젝트	-	9개
	대학 일반채정지원	2.1조원	2.4조원
농산어촌	직불금 예산	2.8조원	3.1조원
	청년농 농지지원	1,875ha	3,500ha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	2개소(300억원)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1 강하고 사기높은 군대

- ◇ '녹물관사' 제로화, 얼음정수기 도입 등 장병 병영환경 전면 개선
- ◇ 비대칭 전력 대응, 3축체계 구축 등 첨단기반 전투력 강화
- ◇ 2년연속 보훈보상금 5% 인상 등 일류보훈체계 구축

【 장병 사기제고 핵심 】

(4.3 → 5.4조원)

- (초급간부)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및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등 인센티브 강화(+0.3조원)
 - (주거여건) '녹물 관사' 제로화,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초급간부 주거지원 강화(+0.3조원)
 - 노후숙소 전량 개선(1.4→4.2만개), 주거시설 확대(1.7→1.9만개, 모듈러 숙소 250개 포함)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3년 이상 간부 → 3년 미만 초급간부도 포함, +0.5만명)
 - (복무장려금)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및 대상 확대(+0.02조원)
 - 장려금 : 장교 900→1,200만원(+300만원), 부사관 750→1,000만원(+250만원), 대상 : 대학 재학 중 학사·학군단 → 졸업 후 학사장교까지 지급(+500명)
- (병사) '24년 병봉급 165만원(+30만원)으로 인상, 플리스형 스웨터 쏘장병 지급 등 현장 맞춤형 병영환경 조성 (+0.8조원)
 - 병영환경 : 플리스형 스웨터 쏘장병 보급, 얼음정수기 전 부대 보급^{신규}(+1.5만대),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환(침상형 → 2~4인실, 신규 65개동)
 - 병 봉급 : 병봉급(병장기준) 100→125만원 ('25년 150만원)
사회진출지원금 30→40만원 ('25년 55만원)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초급간부 처우개선	7,901	10,900	녹물, 노후관사 개·보수 41,780개(+2,197억원) 주거시설 확대 17,117→18,781개 (모듈러 250실 포함, 5,260억원) 단기복무장려금 '22대비 +100% 대상 확대(+500명)
- 병 사기진작	34,836	43,067	플리스형스웨터 육군 간부 → 쏘장병 확대 보급 얼음정수기 +1.5만대 신규 보급 병봉급 월 130→165만원(병장기준)

【 첨단전력 】

(6.8 → 7.9조원)

- **(비대칭전력 대응)**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0.3조원)
 - (SI유·무인복합)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신규}(100억원), 다목적 무인차량^{신규}(44억원)
 - (첨단기술 新영역) 근거리 정찰드론(+14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 기술개발(+461억원)
- **(3축체계)** 한국형구축함의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능력 제고(+1.0조원)
 - (전략표적타격) F-15K 성능개량^{신규}(246억원), KDX-II 성능개량^{신규}(192억원)
 - (한국형미사일방어) 광개토-III Batch-II(+1,443억원), 철매-II 성능개량 2차(+1,042억원)
 - (압도적대응) UH/HH-60 성능개량^{신규}(290억원), 230mm급다련장(+1,385억원)
 - (3축기반) 항공통제기 2차(+1,089억원), Link-16 성능개량(+578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비대칭전력 강화	10,033	13,135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초소형위성체계
- 3축체계 고도화	61,257	71,565	F-15K성능개량, 특수작전헬기성능개량

【 일류보훈 체계 】

(6.2 → 6.4조원)

- **(보상금)** 2년 연속 보상금을 5%대로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보상격차 개선(+0.2조원)
 - * 7급 상이자 총 7%,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 총 17.5%, 참전명예수당 3만원 인상
 - 저소득 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 폐지*
 - * 중증장애인('23) → 노인('24) → 전면 폐지('25) 순으로 폐지(보훈대상자 기준)
- **(보훈문화)** ICT 디지털 전시관(4개소)^{신규}, 월남전 유공자 제복 증정^{신규} 등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0.02조원)
- **(의료지원)** 보훈 위탁병원 확대(+100개소), 심리재활서비스를 위한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신규}(21억원)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보상수준 확대	47,797	49,972	기본인상 +5%, 급여격차 개선
- 보훈문화 확산	803	1,138	ICT디지털전시관, 월남전 참전유공자 제복증정

2 공공질서·안전 시스템 강화

- ◇ 마약, 문지마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
-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예방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지원 강화
- ◇ 디지털 기반 수해예방 인프라 고도화로 수해 안전지대 구축

【 범죄대응 】

(0.2 → 1.0조원)

- (마약)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 → 수사 → 재활’ 전주기 지원예산 2배이상 확대(238→602억원)
 - (예방) 대국민 마약 예방교육(3→45억원), 마약류 오남용 방지 홍보(9→30억원)
 - (대응) 수사·감시 장비(55→157억원), 유통·밀수 방지 가상화폐 추적(9→22억원)
 - (재활)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3→17개소),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신규}(14억원)
- (문지마 범죄) 경찰의 범죄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저위험 권총(3인1총기→1인1총기)과 흉기대응 장비* 보급 확대(14→108억원)
 - * 101개 기동대 흉기대응 장비(방검복, 삼단봉) 보급^{신규}(+16억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매주택 매입 지원^{신규}(5천호), 피해자가 주택구입·전세시 대출 확대 등 피해구제 확대(+0.7조원)
 - (예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속 지원(61억원)
 - (대응) 거래조사 확대 등(+20억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운영^{신규} 등(+42억원)
 - (구제) 피해자 주택 매입^{신규}(0.5만호, +0.7조원), 대출지원 확대(0.2→0.4조원)
- (피해자지원)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증원(+10명) 등을 통해 아동·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정신건강 지원^{핵심} 】

(0.05→0.1조원)

- (국민정신건강) 전주기(예방·조기발견-치료-복귀)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마음 상담 프로그램 신설(고·중위험군 8만명), 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
 - (예방) 고·중위험군 상담지원^{신규}(+8만명, 5년간 100만명), 자살예방 전화상담사(80→100명)
 - (치료·복귀) 정신 응급의료센터 확충(10→12개소), 정신 재활시설 환경개선(39→48개소)
 - (인식개선)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예방교육 강사 양성(+35억원)

【 수해대응 체계 고도화 핵심 】

(5.1 → 6.3조원)

- **(인프라)**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 댐 신규 건설과 저수지 준설을 대폭 확대(+1.1조원)
 -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 및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 지원 확대
 - (하천·저수지) 국가하천 준설(3→19개), 지방하천→국가하천 승격(10개), 국가-지방하천 합류구간 정비(20개), 댐 신규 건설(10개소), 저수지 준설(77개)
 - (도심침수 대응) 빗물저류시설(6개 지역), 침수도로 자동차단시설 2배 확대(90→180개)
 - (산사태 방지) 사방설비 확대(+314억원), 급경사지 점검 강화(0.5→1만개소)
- **(예보)** 전국 주요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 구축(+0.1조원)
 - (AI) 인공지능 모델기반 홍수예보 확대(75→223개소, 홍수발생 3→6시간전 예보)
 - (디지털트윈) 댐-하천 플랫폼 조기 완료(당초 '26년 완료), 저수지플랫폼 신규 착수

【 생활안전 】

(3.9 → 4.6조원)

- **(SOC)**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하차도 침수 방지 및 열차 선로·전력설비 집중개량
- **(안전예방)** 실화재 훈련장 건립으로 소방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지역별 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소 선제 발굴 추진
 - (SOC) 탈선방지 열차선로 개량(0.3→0.5조원), 지하차도 침수방지 등 도로정비(1.7→1.9조원)
 - (안전훈련)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시설 신규 (3개소), 5대 권역별 안전진단 시범실시 신규

(단위: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범죄대응 강화	2,195	10,266	
- 마약범죄 근절	238	602	수사·감시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전국확대
- 묻지마 범죄 예방·대응	14	108	저위험 권총보급, 방검복 등 흉기대응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	7,125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0.5만호)
- 피해자 지원강화	1,027	1,169	원스톱솔루션센터, 국선전담변호사 증원(+10명)
○ 정신건강 지원	537	1,174	
- 예방 및 치료	443	1,007	위험군 정신상담, 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10→12개소)
- 재활 및 인식개선	93	167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39→48개소), 홍보 강화
○ 수해대응 고도화	50,867	63,223	
- 국가하천정비	4,510	6,627	국가하천 지류, 국가-지방하천 합류 구간 정비
- 저수지 준설	6,518	7,462	대규모 저수지 정비
- AI 홍수예보체계 구축	169	844	주요 하천 AI기반 조기경보망(3→6시간전) 구축
○ SOC·생활안전	39,101	45,803	
- 철도·도로안전 개선 등	39,101	45,781	도로위 낙석·산사태방지, 탈선방지 열차선로 개량
- 지역별 안전진단	-	22	5대권역 위험요소 발굴 안전진단 시범실시

3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책임 강화

-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 창출(4.5 → 6.5조원)
- ◇ 한국어 보급 인프라 강화, UN안보리 활동 등 글로벌 국제 협력 강화

【 국격에 걸맞은 ODA 확대 핵심 】 (4.5 → 6.5조원)

-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지원 5배 확대(+0.4조원)로 우리기업 진출 기반 조성 및 재난대응·식량* 지원(+0.4조원) 확대
 - * 대개도국 식량원조(5만톤 → 10만톤),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1개국 → 7개국) 등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분야 지원 확대(+0.3조원) 및 청년인재의 해외진출 지원(0.3→0.4만명)
- (전략지역) 경제협력 관계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인·태지역과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0.6조원)

【 국제협력 강화 】 (0.1 → 0.16조원)

- (한국어보급) 한국문화 전파와 글로벌 연대를 위해 한국어 교원 파견과 교재 개발 지원 확대
 - * 세종학당·현지학교 한국어교원 파견 확대(356→420명), 세종학당 아카데미 확대(60→92개소), 유학생 유치박람회(4→25회), 해외 유학생 유치센터 설치 신규(9개소)
- (국제질서 수호) '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신규(20억원) 및 북한실상 영상 제작 신규(16억원)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인식 제고

(단위: 억원)

구분	'23년	'24년案	비고
- 우크라이나 지원	629	5,200	재건(1,300억원)·인도(2,600억원)·국제기구(1,300억원)
- 디지털디바이드 해소	6,254	9,210	EDCF(3,390억원), 무상원조*(5,820억원) * 디지털 교육(121), 개도국정보센터(35) 등
- 인태지역 아프리카 지원	13,500	19,525	EDCF(1.2조원), 무상원조(0.7조원)
- 대개도국 식량원조	519	1,134	식량원조 2배 확대(5만톤→10만톤)
- 한국어교원 파견	157	185	세종학당(270→300명), 현지 정규학교(86→120명)
- 한국교육원 운영	188	301	한국교육원 신설, 유학생 유치박람회·유치센터

['24년 달라지는 모습]

과 제	주요 프로그램	'23년	'24년
강한군대 육성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6.1조원	7.2조원
	노후시설 개선 / 모듈러 숙소	14,473개/40실	41,780개/250실
	얼음정수기 보급	-	14,772개
	단기복무장려금	장교 900만원 부사관 750만원	장교 1,200만원 부사관 1,000만원
	병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월 130만원	월 165만원
	보훈보상금(상이 1급 1항)	월 351만원	월 368만원
마약근절	첨단 수사·감시 장비	55억원	157억원
	중독재활센터	3개소	17개소
문지마범죄 예방	고·중위험군 상담지원	-	8만명
	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	3인 1총기	1인 1총기
수해예방	지방 → 국가하천 승격	-	10개
	하천합류구간 본격 정비	-	20개
	AI 홍수예보(6시간전 알림)	75개소	223개소
ODA	우크라이나 재건	0.1조원	0.5조원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0.6조원	0.9조원
	청년인재 해외진출	3,405명	4,440명
국제협력 강화	한국어교원 파견	356명	420명
	세종학당 아카데미	60개소	92개소
	북한 실상 콘텐츠 제작	-	쇼츠 30, 다큐 4회

1. 보건·복지·고용 분야
2. 교육 분야
3. 문화·체육·관광 분야
4. 환경 분야
5. R&D 분야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7. SOC 분야
8. 농림·수산·식품 분야
9. 국방 분야
10. 외교·통일 분야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12. 일반·지방행정 분야

- ◇ 저소득·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
- ◇ 가족돌봄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 ◇ 필수의료 분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주기 투자 확대

□ 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보장수준 강화

-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인 13.2% 인상* 및 선정기준 상향(중위30→32%),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4.5만 가구 추가 지원
 - * 4인가구 기준 162.0→183.4만원/월, +21.3만원
 - ** (다인·다자녀, 도서벽지) 소득환산율 100→4.17% 인하, (생업용) 소득산정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3.5만명)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완화(+1.4만명)*
 - * 기본재산공제액 지역별 1.0~2.3억원→2.0~3.6억원 상향
- 노인일자리 +14.7만명 확대(88.3→103.0만명) 및 수당 2~4만원 인상, 기초연금 1.1만원 인상(月32.3→33.4만원) 등 일자리·소득지원 강화
 -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5.7만명) 대상 돌봄지원 확대(月16→20시간)
-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돌봄, 24시간 돌봄 지원 강화*로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도 대폭 확대**
 - * (주간돌봄) 1단계 그룹형 1:1 1.5천명신규, 2단계 개별 1:1 0.5천명신규
(24시간돌봄) 3단계 개별 : 1개소(시범)→17개소(전국 확대)
 - ** 11.5→12.4만명,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 6천→1만명/151.5→195시간

□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구축

-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활동비(6만명, 연40~60만원), 맞춤형 직업 훈련(자녀 200명, 부모 1,500명), 이주부모 모국어 학습(0.4만명) 신규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月20~21만원) 지원대상 확대(중위60→63%, 18세 미만 → 18세 이상 고교재학생)로 3.2만명 추가 지원
 - 0~1세 자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양육비 추가 지원(月35→40만원)
- 가족돌봄청년의 학습, 신체·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자기돌봄비를 신규 지원하고(분기당 50만원), 가족돌봄서비스 지원(2천명, 月70만원)

-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기반 확충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月40→50만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연령·대상 확대(12~17세 → 0~17세, 생계·의료 →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5.0→18.3만명)
 - 일을 통한 탈수급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 인원 확대(6.6→6.9만명),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청년특례 대상 확대(만24세→29세 이하)
-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로 필수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신질환 “예방·조기발견 - 치료 - 복귀” 전주기 투자 대폭 확대
 - 달빛어린이병원(45개소)에 대해 국고 지원에 착수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2→14개소) 및 소아암 전문 거점병원(신규 5개소) 확충 - 소아환자에게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상담센터 신설(5개소)
 - 응급환자 신속대응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10→12개소) 하고, 이동형 응급실(닥터카) 도입(1개) 및 닥터헬기 확충(8→9개소)
 - 국민의 스트레스·우울·불안 마음 상담 프로그램 신설(24년 고·중위험군 8만명),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10→12개소)

(억원)

구 분	'23	'24案	비고
▪ 기초생활보장	191,355	208,262	· 생계급여 +15,269억원, 주거급여 +1,702억원
▪ 취약계층지원	52,141	54,619	· 장애인활동지원 +2,927억원, 발달장애인지원 +999억원
▪ 공적연금	713,246	808,562	· 국민연금급여지급 +71,442억원
▪ 보훈	62,475	64,690	· 보상금 1,429억원, 6·25자녀수당 +745억원
▪ 주택	334,413	374,039	· 주택구입 전세자금 +19,845억원, 공공임대 +7,009억원
▪ 사회복지일반	10,127	10,489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6억원
▪ 아동·보육	98,476	108,561	· 부모급여 +12,672억원, 첫만남이용권 +610억원
▪ 노인	232,289	256,330	· 기초연금 +16,710억원, 노인일자리 +4,862억원
▪ 여성·가족·청소년	15,302	16,779	· 아이돌봄지원 +1,133억원, 건강가정·다문화지원 +382억원
▪ 고용	236,316	222,441	· 모성보호육아지원 +3,937억원, 청년취업 +1,120억원
▪ 노동	107,280	107,487	· 산재예방시설용자 +1,023억원, 산재보험급여 +838억원
▪ 고용노동일반	6,339	6,497	·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11억원
▪ 보건의료	69,409	43,161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2,527억원
▪ 건강보험	124,102	139,742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14,581억원
▪ 식품의약품안전	6,764	7,161	· 마약퇴치운동본부 +123억원
합 계	2,260,032	2,428,819	전년대비 +7.5%

〈참고〉 일자리 분야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취약계층·민간고용확충에 집중 지원하도록 사업 재구조화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혜자별 종합지원체계 구축

○ (NEET청년) 「발굴→구직의욕고취(상담·훈련 등)→맞춤형 일경험→온보딩(직장조기적응)」 등 NEET청년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NEET청년플랫폼^{신규}(10개소, 281억원), NEET청년일경험프로그램^{신규}(6천명, 43억원)

○ (일반청년) 대학일자리+센터를 통해 전문계고·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폭 확대, 취업비용 부담경감 및 일경험 등 지원

*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3→17만명, +366억원), 청년기술자격응시료경감^{신규}(56만명, 242억원), 청년일경험지원(2.6→4.2만명, +1,067억원), 일자리도약장려금(9→12만명, +413억원)

○ (고역량청년) 첨단산업·대기업 및 해외취업 등 양질의 취업을 원하는 청년의 수요에 맞춰 교육, 훈련, 취업 지원

* 산학연협력고도화지원(+1,276억원), 첨단분야직업훈련(3.6→4.4만명, +569억원),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신규}(300명), K-Move스쿨(2,100→3,100명, +123억원)

○ (빈일자리) 빈일자리에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인난 기업 취업 청년에게 장려금 지급 신설

* 청년빈일자리장려금^{신규}(6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원(한시), 2.4만명, 483억원)

□ 이중구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 노동개혁 뒷받침

○ (이중구조개선) 「대기업·정규직 - 하청·비정규직」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직무성과 임금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격차완화*** 지원

* 업종(3개)·사업장별(150개소)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원하청참여)^{신규}

**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신규}(100억원), 원하청 상생연대기금^{신규}(2·3차협력사, 50억원)

*** 위험공정교체 지원업종(뿌리·고위험3대→6대업종)·대상기업 확대(0.2→0.4만개소)

○ (근로유연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신설(月 30만원), 유연근무 활성화 인프라·컨설팅 확대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육아휴직)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기간·영아기특례 대폭 확대*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자녀연령·급여·사용기간 확대**
 - * (육아휴직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개월 연장(12→18개월)
(영아기특례) 출산후 1년간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3→6개월 상한 300→450만원
 - ** (자녀연령) 8→12세, (급여) 주 5→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 최대 24→36개월
- (고용안정) 근로시간 단축·대체인력 지원* 확대 및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신설(0.7만명) 등 육아휴직 등에 따른 사업주 부담경감
 - * 육아기 단축자 업무대행자에게 수당 지급 사업주에 업무분담지원금 지급(月 20만원)

□ 노인·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위주 직접일자리 집중지원

-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또는 성과저조 한시사업*은 감축하고, 노인·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 투자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1→1.0만명, △1,234억원), 디지털배움터(0.4→0.15만명, △419억원) 등
 - ** 노인일자리(88→103만명, +4,859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3.7→3.9만명, +441억원) 자활사업(6.6→6.9만명, +501억원) 등

□ 실업급여 강화, 장애인 고용창출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속 지원하고, 재취업 촉진* 및 사중손실 방지**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개선 실시
 - * 취업 후 1년간 고용유지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65세 이상 취업계획 수립시 수당 선지급
 - ** 고임금·공무원 재취업자에 대한 수급 제한으로 사중손실 방지
- (장애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 확대(1.1→1.3만명) 및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 * 장애인고용장려금(61.1→63.3만명), 표준사업장(147→172개소) 등

(억원)

구 분	'23	'24案	비고
▪ 직접일자리	31,837	35,557	· 노인일자리(88.3→103만명), 자활(6.6→6.9만명) 등
▪ 직업훈련	27,467	26,082	· 첨단분야인력양성(3.6→4.4만명) 등
▪ 고용서비스	17,745	16,345	· 대학일자리+센터(403→828억원) 등
▪ 고용장려금	50,634	42,742	· 육아휴직급여(13.2→16.9만명) 등
▪ 창업지원	31,944	32,683	· TIPS(2,681→3,614억원) 등
▪ 실업소득 유지·지원	134,404	129,060	· 구직급여(161→158만명), 두루누리(128→97만명) 등
▪ 장애인지원	9,669	10,380	· 장애인고용장려금(61.1→63.3만명) 등
합 계	303,700	292,878	전년대비 △3.6%

2 **교육 분야**

- ◇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 ◇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 ◇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고, 국립대학 시설·인프라 강화
- ◇ 지역·대학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 지원
- ◇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 강화 뒷받침

1 취약계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격차 해소

- (유초중등)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기본 교육수요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학교폭력·다문화·장애학생 등 소외계층 포용
 - *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신규, 4.5억원),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0.4→0.8만명)
- (고등) 국가장학금 단가인상*, 근로장학금 확대,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350→400만원) 등 저소득층 대학생 맞춤형 지원
 -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전액 지원, 저소득층 +30~50만원 인상
- (평생·직업)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속 지원(1,215억원)하고,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확대(6→8만명)
 - * 평생교육바우처: ('23) 206 → ('24) 262억원 (+56억원)

2 대학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고, 국립대학 시설·인프라 강화

- (대학혁신) 등록금 동결, 물가인상 등에 따른 대학의 열악한 재정보장을 위해 대학 일반재정지원 사업 확대(+15.1%)
 - * 대학혁신지원: 8,000→8,800억원, 지방(전문대) 활성화: 2,500→3,125억원
 - 국립대학육성: 4,568→5,710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5,590→6,149억원
- 성과배분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 유도
 - *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30→36%, 국립대학 육성·지방대학 활성화: 40→60%
- (국립대학) 우선순위가 낮은 일반보수비, 범용 기자재 투자를 축소하여 생활안전 투자 및 첨단 기자재 확충예산에 재투자
 - * 석면교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조기 완료(26→25년), 반도체 등 고가·첨단 기자재 교체(+275억원), 동물실험실 구축 확대(+212억원)

- (사립대학 구조개선) 사립대학의 체계적 회생 및 퇴로마련 등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경영자문 컨설팅 지원(25→53억원, 30개교)

*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법'(상임위 계류중)상 경영위기 대학의 경영자문 조항 신설

③ 지역중심대학 전환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 (지역중심대학)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역량 가진 지방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육성(30개, 교당 5년간 1,000억원)

* '24년 7개 대학지원사업을 RISE로 통합하여 지자체가 직접 투자분야, 지원대학 등 선정

- (인재양성) 특성화 대학(8→21개), 단기교육과정(부트캠프, 10→42개), 계약학과(4년제 +6교, 대학원 +3교) 등 첨단분야 핵심인재 적극 양성

* (특성화대학) 반도체 신규 10개교(수도권 7개, 비수도권 3개), 이차전지^{신규} 3개교 신설

* (부트캠프) 반도체 신규 17개교(2,000→5,400명), 반도체 외 4개 분야 신설(3,000명)

④ 디지털 혁신 및 글로벌 역량강화

- (디지털)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구축 확대(3→9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비용(13억원) 등 디지털 기술의 교육현장 활용을 적극 지원

* 초·중·고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18→60억원(+42), 대학 기초교양 에듀테크: 14억원(신규)

- (글로벌) 해외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유학생 유치 활성화, 한미·한일간 청년 국제교류 확대 등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 해외 초·중·고 한국어반(2,000→2,200교), 한국어채택교 교원 파견(86→120명)

** 유학생 유치센터(+9개) 및 한국교육원 신설(4개), 한미대학생 연수(WEST, 176→300명)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유아·초·중·고 교육	809,120	737,406	· 고교무상교육(9,028→9,439억원)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34,700→32,106억원)
▪ 고등교육	140,100	144,849	· 대학일반재정지원(20,658→23,784억원) · 산학연협력고도화 지원(2,547→4,438억원)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11,520→12,025억원)
▪ 평생·직업교육	11,977	12,711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206→262억원) ·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784→902억원) · 에듀테크소프트웨어 구축 및 운영(18→104억원)
▪ 교육일반	1,533	1,578	· 교육위원회 운영지원(46→48억원)
합 계	962,730	896,544	전년대비 △6.9%

3

문화·체육·관광 분야

- ◇ 정책금융 1.8조원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적극 지원
- ◇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생활·전문 스포츠에 대한 투자 강화
- ◇ 관광산업의 완전한 회복·도약을 위해 한국방문의 해 활용
방한 관광객 적극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위해 관광 인프라 확충

□ 정책금융 1.8조원 추가 공급, OTT 제작역량 강화, 콘텐츠 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등 K-콘텐츠 전방위 지원

- 정책금융* 대폭 확대('23년 0.8→'24년 1.8조원), 버추얼 스튜디오 신설 (125억원), OTT 전문인력 양성(신규, 10억원)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

* (펀드) '23년 4,500→'24년 12,900 (보증) '23년 2,200→'24년 2,400 (이차보전) '23년 1,600→'24년 2,400억원

- 해외거점(15→25개소), 홍보관(두바이), 기업지원센터*(미국·일본, 신규) 등 확충을 통해 K-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 적극 지원

* 현지법인 초기 설립·운영 관련 인큐베이팅 지원, K-콘텐츠 종합체험관 운영 등

□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대폭 높여주는 한편, 예술인 창작 간접지원 사업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신규}(32억원), 장애인 예술인 맞춤형 표준전시장 개관 등 소외계층 문화 접근성 제고

* '23년 인당 연 11만원 → '24년인당 연 13만원

- 기존 분산지원에서 나아가 수요맞춤형 공연·전시 사업으로 재구조화* 및 지역 창작공간, 창·제작 확대 등 체감형 문화사업 중점 편성

* 중·소형 규모 300건, 중형 규모 30건, 국립예술단체 전막 지역공연 7건

□ 일상적 체육활동 기반 확충,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 올림픽·패럴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 등 생활·전문체육 역량 강화

-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및 연령별 맞춤형 체육시설·프로그램 확충** 등 일상적 생활체육 활동 기반 확충

* (지원금액) 월 9.5 → 비장애인 10, 장애인 11만원, (인원) 10.6 → 14만명

** 국민체육센터 시니어친화형 8개소 추가, 유아친화형 3개소 신규 반영

- 국가대표 훈련여건 개선* 및 '24년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지원 예산 보강(172억원) 등 전문 엘리트 체육 활동 적극 지원

* 경영풀 훈련장 개보수(55억원), 식비(日 44→50천원), 숙박비(日 6→8만원) 단가인상 등

-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및 지역 활성화 위한 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 지원

- K-컬처 활용 한국방문의 해 행사 확대 및 국제적 스포츠 행사 유치 등을 통한 방한 관광객 적극 유치

* (한국방문의 해) 100→178억원 (E-포물러·MLB 개막전 등 관광 활용) 16→39억원

-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역권 관광개발* 지속 투자 및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본격 추진

* 관광거점도시(5개소) 443→576억원, 3대 광역관광개발 608→690억원

** 인구소멸지역 방문객 대상 주민증 발급 통한 할인혜택 제공, 시범15→확대40개 지역

- 문화재 규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보편적 문화재 활용을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

-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확대(8→12월)를 통한 사회적 갈등 해소 노력 지속 추진

* 사유지 매입 685→1,133억원, 문화유산 관람 지원 421→554억원

- 무형유산 지원 확대*를 통한 무형유산 전승 기반 확충 및 무장애 공간 조성·공능 활용 프로그램** 등 문화재 접근성 확대

* (무형유산 월정지원금) 보유자 150→200만원, 우수이수자(신설) 50만원

** 경북궁 무장애 공간 조성 5→20억원,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확대 50→94회

(억원)

구분	'23	'24案	비고
· 문화예술	40,022	39,785	·K-콘텐츠 정책금융(+2,040, 자금공급 0.9조원 확대) ·버추얼스튜디오(+125), OTT 등 콘텐츠 전문인력양성(+10)
· 체육	16,398	16,70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51, 1.5만원 인상, 2.4만명 확대) ·연령별 국민체육센터(+56, 시니어 +8개소, 유아형 3개소 신규) ·우수선수양성지원(+125), 장애인전문체육·국제체육지원(+58)
· 관광	12,339	13,664	·한국방문의 해(+78) ·관광거점도시(+133), 광역권 관광개발(+82)
· 문화재	13,508	13,489	·문화재보수정비(총액)(+469), 문화유산 관람 지원(+133) ·무형유산원 운영(+123, 무형유산 보유자 지원금 月 +50만원)
합계	86,059	87,377	전년대비 +1.5%

- ◇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 ◇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 환경 취약계층 복지 강화,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

①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의 홍수·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 (물환경) 도시침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을 정비하고, 신·증설을 신속 추진하도록 투자 대폭 확대
 - 하수처리재이용수 공급망을 확대하여 핵심 산업에 안정적 용수 공급 추진(497→527억원)
- (먹는물) 안전한 먹는물 공급 및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자체 노후 상수관 및 정수장 개량에 국가 지원 확대
 - * 노후상수관망 18개소, 정수장 9개소 포함 총 27개소 신규 지원

②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산업) 녹색기업 창업*과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초기단계 금융지원(미래환경산업 엑셀러레이터펀드^{신규}) 강화
 - * 기존 창업지원 확대 및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특화 지원 신규도입
 - 사업발굴-해외실증-수출금융* 등 소주기 수출 지원체계 구축하고, EU 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신규}24억원)
 - * 녹색 인프라 해외수출 지원 펀드(5년간 총 4,000억원) 신규 도입
- (저탄소) 전기승용차·수소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하고, 급속 확대·미래형충전기* 도입 등 충전인프라 적극 확충
 - * 노후아파트 등 충전사각지대에 설치하는 이동형 급속충전기 300기, 화재위험 최소화를 위한 화재예방 충전기 +10,000기 시범도입

구 분	'23년(안)	'24년 목표	전년대비
전기차(누적)	67만대	96.6만대	+29.6만대
수소차(누적)	4.7만대	5.8만대	+1.1만대
전기차 충전기(누적)	30만기	44만기	+14만기
수소차 충전소(누적)	320기	385기	+65기

-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 확대(40→100만명)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및 탄소포인트제 등(240→311억원)

③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극한기후로 부담이 가중되는 기후 취약계층의 가정 내 고효율 단열재 설치, 냉난방기 보급 확대(910→1,083억원)
 -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277→455억원)을 위한 국가 역할 강화
- (국립공원) 23번째 국립공원(팔공산 국립공원, 신규126억원) 지정 등 국민들의 환경여가 인프라 지속 투자
- (검역) 야생동물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의무사전검역 제도 시행('24.5~)

(억원)

구 분	'23년	'24년案	비고
▪ 물환경	44,048	47,889	- 하수관로 설치(9,531→12,512억원)
▪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14,605	14,484	-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2,789→3,799억원) -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646→1,572억원)
▪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45,230	45,314	- 무공해차 보급사업 (25,652→23,988억원) -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환경부)(104→236억원)
▪ 자연환경	10,181	8,908	-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2,864→2,115억원)
▪ 환경일반	5,015	5,512	- 재해대책비(500억원, 신규)
▪ 해양환경	3,409	3,434	- 해양폐기물정화사업(363→481억원)
합 계	122,487	125,541	전년대비 +2.5%

- ◇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혁신기술 내재화에 집중 투자
- ◇ 국가전략기술 R&D 투자를 대규모 전략프로젝트, 글로벌 협력, 신진연구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파급력 있는 성과 창출

-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전년대비 증액(6.3%)된 5.0조원 규모로 AI, 첨단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혁신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투자
 - (AI) 한계 돌파(학습·소통능력, 신뢰성) R&D, 산업난제 해결·메타버스 융합 등 응용서비스,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 *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신규} 40억원
 -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신규} 619억원
 - (첨단바이오) 바이오헬스에 AI, 빅데이터 등 ICT·디지털을 융합한 첨단바이오 중심 투자로 신시장 선점
 - *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3) 2,302 → ('24) 3,049억원
 - * 연구중심병원육성 ('23) 468 → ('24) 605억원
 - (반도체) 미세공정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AI반도체 기반 기술 개발 등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 AI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고도화 선도기술 개발^{신규} 75억원
 - (디지털)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기존 기술간 연계·융합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 *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 공동연구^{신규} 29억원
 - * 디지털분야 글로벌 인재양성^{신규} 80억원
- 바이오·우주 등 첨단분야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주도할 대규모 전략프로젝트(Flagship) 추진
 - (KARPA-H 프로젝트)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 분야 난제를 혁신적 R&D 지원 시스템 아래 수행(10년간 1.9조원)
 - * 美 DARPA형(PM 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R&D 수행
 - (우주산업 클러스터) 민간의 우주산업 확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 시험시설,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구축(8년간 6천억원)

□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를 극복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R&D 확대(0.5→1.8조원)

○ 국내외 세계최고 그룹간 공동연구, 신진연구자 해외선도연구 참여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확대

- 미국 우수 대학·연구소(MIT 등)에 협력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성 있는 협력추진, 해외 우수과학자 국내 유치 등 인적교류 투자 강화

* 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 ('23) 69 → ('24) 196억원

○ 첨단바이오 분야의 선진기술 접목 및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팀 코리아'로 추진(864억원)

□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내)의 초기 탐색 연구지원 확대(0.4 → 0.5조원)

○ 젊은 연구원 대상 연구실구축지원(최초혁신실험실), 국외연수(세종과학펠로우십 등) 확대

* (임용전 연수 확대) 600 → 1,116개, (연구실 초기 정착 지원) 최대 5억원, 200개, (신진연구지원) 450 → 800개, 연구비 年 1.5 → 3억원

(억원)

구 분	'23	'24案	비 고
· 과학기술·통신 분야	100,223	90,768	· 개인기초연구(과기부)(16,367→16,363) ·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290→1,101) ·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755→1,076)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5,714	62,972	· 산업기술국제협력(1,061→1,748) · 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1,186→1,645)
· 교육 분야	29,879	12,476	·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5,290→3,927) ·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262→196)
· 보건·복지 분야	10,979	11,999	· 한국형 KARPA-H 프로젝트(495, 신규) · 글로벌연구협력지원(41→287)
· SOC 분야	11,030	8,126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503→594) ·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기술개발(113→159)
· 기타 부문	82,953	72,810	·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80, 신규) · 환경성질환예방관리핵심기술개발(139→163)
합 계	310,778	259,152	전년대비 △16.6%

※ 교육·기타 부문 R&D 총량 감소 중 일부(1.8조원 규모)는 R&D → 일반 재정사업 재분류에 기인

- ◇ 「수출드라이브 +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을 통해 민간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 ◇ 고효율 에너지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
- ◇ 소상공인의 경영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도 지원

- 수출 드라이브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 (수출)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디지털 수출 지원 등으로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분야 집중지원(1.1조원)
 - * (애로해소) 조선업 RG 등 무역금융 확대(+1.3조), 수출바우처 확대(3,473→3,984개사) (유망분야) 원전·방산분야 거점 무역관(30→47개) 및 플랜트 수주지원센터(7→11개) 확대
 - (투자) 첨단분야 외국인, 국내복귀 투자 촉진 및 국내 지방이전 투자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 상향 및 자금지원 규모 확대(0.5조원)
 - * 국가전략첨단기술 분야 기업 외국인·유턴 투자시 투자금액의 최대 50%지원(당초 40%)
-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 (약자보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상향(0.7조원)
 - * [대상] ('23) 생계의료 기후민감(85.7만가구) → ('24) 기초생보 기후민감(115.0만가구)
 - [단가] ('23) 34.7만원(冬 30.4 + 夏 4.3) → ('24) 36.7만원(冬 31.4 + 夏 5.3)
 - (효율향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진단 및 고효율 설비 보급 지원 확대(0.4조원)
 - (자원안보) 석유·핵심광물 등 기존 에너지원의 비축 지원을 확대하고, 원전 및 신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지원
-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인프라·인력양성 투자 확대
 - (인프라) 메모리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금융 등 지원 강화(0.12조원)
 - (인력양성)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글로벌 창업지원, 지역벤처 활성화 등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 (글로벌화)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신규 조성(0.15조원), 국내기업의 해외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신설(20개사) 등 창업지원 강화(0.2조원)
 - (국내안착)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사업화자금 등 지원(963개사), 글로벌기업·대기업 협업 지원(387개사) 등(0.3조원)
 - (지역벤처) 지역엔젤투자허브 조성(3→4개소), 지자체가 추천하는 예비유니콘기업 보증 지원 등 지역창업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재도전을 뒷받침하고, 수출지원 등 성장 환경 조성
 - (자금) 사업전환·재창업자금 등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자금지원 규모 확대(2.1조원)
 - (해외진출) 사우디(리야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등 주요수출 국가 중심 GBC 신규개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 (부담경감) 취약차주 저리 대환대출(0.5조원) 신설,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6.4만대) 등을 통해 각종 비용 부담 경감(+1.0조원)
 -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스마트 상점·공방(0.8만개), e커머스 소상공인(8만명) 등 스마트화 지속

(억원)

구 분	'23	'24案	비고
▪ 무역 및 투자유치	9,156	9,873	KOTRA 지원 3,213, 무역보험기금출연 950억원
▪ 창업 및 벤처	39,864	40,688	혁신창업사업화용자 21,458, 재도약지원용자 5,318억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90,906	99,584	소상공인용자 38,000, 신성장기반용자 15,289억원
▪ 에너지 및 자원개발	49,304	50,776	에너지바우처 6,856,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000억원
▪ 산업혁신지원	60,082	60,763	투자유치기반조성 3,579, 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용자 1,000억원
▪ 지식재산일반	3,556	3,565	특허심사지원 633, 지식재산활용지원 241억원
▪ 산업·중소기업 일반	7,169	7,436	인건비 5,726, 기본경비 1,120억원
합 계	260,038	272,686	전년대비 +4.9%

- ◇ GTX 등 핵심 교통인프라 적기개통 및 안전투자 강화
- ◇ K-Pass, 미래 모빌리티 등 편리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

-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핵심 국가교통망 적기개통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지원
 - (수도권 GTX) 기존 노선(A·B·C)은 개통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지원하고, 신규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지속 추진(1억원)
 - * (GTX-A, 재정·민자) 5,059→1,805억원(공사비·건설보조금)
(GTX-B, 재정·민자) 384→3,562억원(공사비 등) (GTX-C) 1,276→1,880억원(용지비 등)
 - (지역 교통인프라) 신규 도로·철도* 확충, 지역 공항 인프라** 지원 등으로 메가시티 1시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 촉진
 - * 고속도로 2건, 철도 9건 착공 / ** 가덕도신공항 건설(130→5,363억원)
- (안전투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 적기 추진 및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
 -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교량·터널 보수*(1,239 → 1,817억원), 지하차도 침수방지**(108억원, 신규) 등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
 - *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불연소재 교체, 교량·터널 붕괴 예방 시설 보강 등
 - ** 지하차도 침수위험 구간 터널 진입차단시설, 배전시설 지상 이동 등
 - (철도) 열차 탈선 방지를 위한 선로시설·전기설비 집중개량*(3,033 → 4,904억원), 철도 작업자 안전시설** 확대(164 → 643억원)
 - * 노후 선로전환기 교체, 레일 중량화·장대화, 전철전력·신호제어설비 개량
 - ** 교측·옹벽보도, 터널 입·출구 안전난간, 비탈사면 사다리 설치 등

□ (대중교통)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대중교통) K-Pass 도입*으로 편의성 개선 및 교통비 부담 경감, 전기 2층버스 도입 확대(40→50대)로 광역교통 혼잡 완화

* 20회 초과 이용시, 지출 교통비의 20~53% 지원 ⇨ 최대 22~58만원/년

- (교통약자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및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속 지원(3,800대)

* (도입) 456대(101억원) → 558대(124억원) / (운영) 238억원 → 470억원

□ (교통혁신) 자율주행차 상용화, 미래 모빌리티 선점, 도심항공(UAM) 실증, 정밀위치 서비스 등 교통혁신을 위한 선도기반 조성

- (자율주행) 미래 교통환경 대응 및 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확대(304→409억원)

- (모빌리티)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부문 규제 샌드박스 운영 지원^{신규}(21.5억원)

- (도심항공) '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지 항공교통지원 시설구축 및 실증노선 운영(145억원)

- (스마트항공) 인터넷 기반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를 통해 GPS 오차범위를 축소(33→1m)하여 정밀 위치정보 제공^{신규}(19억원)

(억원)

구 분	'23	'24案	비고
○ 도로부문	78,408	78,705	· 건설(5.2→5.1조원) · 안전 등(2.0→2.3조원)
○ 철도부문	75,968	80,501	· 건설(4.3→4.2조원) · 안전 등(2.1→2.5조원)
○ 항만수자원부문	34,562	42,490	· 건설(1.5→1.6조원)
○ 지역 및 도시부문	22,631	18,253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신규} (135억원)
○ 물류·항공·산단 등	38,311	41,400	· 항공·공항(0.3→0.8조원)
합 계	249,881	261,349	전년대비 +4.6%

8 **농림·수산·식품 분야**

- ◇ 농어민 경영안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금 확대·개편
- ◇ 청년 농어업인 및 유망 농식품기업 육성 등 미래성장산업화
- ◇ 농수산물 수급관리 강화, 재해예방 등을 통한 농어가 소득 보호
- ◇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및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 농업직불 예산을 3.1조원으로 확대(+0.3조원)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 촉진
 -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상향(120→130만원, +570억원)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 및 예산 확대(7→10개, +568억원)
 - * 수입보장보험 품목: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 + 사과, 배, 감귤
 - 은퇴직불 도입(+126억원)으로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 확대*(+744억원) 등 쌀 적정생산 유도
 - * (하계) 논콩, 가루쌀 단가 1→2백만원/ha, (동계) 밀 지원물량 12→24.5천ha 등
 -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중립직불 도입(+90억원) 및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 확대(15→24천ha, +70억원)
- 청년 농어업인 육성,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 마련(+0.5조원)
 - 청년농이 농촌에 진입·정착하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청년들이 선호하는 농지를 확보하여 농지 지원 2배로 확대하고 대규모 창업단지 조성(2개, 300억원)으로 민간주도 스마트팜 확산 지원
 - * 청년농 농지 지원: (23년) 1,875ha → (24년안) 3,500ha (+3,535억원)
 - 청년주거 지원 위한 보금자리 주택 신규 4→8개소 확대(+104억원) 및 창농 초기 부담 경감 위해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4→5천명, +392억원)
 -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기존 85%→특례 95%)하여 원활한 창업자금조달 지원(+300억원)
 - 유망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농식품 엑셀러레이터 2배 확대(4→8개) 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성장자금 1:1 매칭 지원(신규, 75억원)

- 농수산물식품 수출기업 육성 및 품목 다양화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94→405억원, 498→1,059개社)하고, 체계화된 수출조직화 지원
-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 및 수해·산사태 등 재해예방 인프라 보강으로 농어가 소득을 보호하고, 먹거리 물가안정 도모
 - 쌀 수급 관리체계를 선제적·과학적 체계로 전환하고, 양곡매입 확대(40→45만톤) 등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10억원), 드론·인공위성 기반 작황 관측체계 구축(15억원)
 - 저수지 준설 대폭 확대(30→430억원), 배수장 시설개선(198억), 저수지 홍수 예·경보체계 도입 등 수해예방 기반 구축
 - 사방사업(+314억원), 산사태 재난 경계피난(+88억원), 임도시설 구조개량(+26억원) 등 산사태 예방 및 피해저감 인프라 확대
 -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698억원) 및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 희망대학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밥상물가 부담 완화
 - * ('23년) 145개교, 234만명, 23억원, ('24년안) 264개교, 연인원 397.2만명, 40억원(+16)

-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 확대
 - 농어촌 유해시설 정비, 생활인프라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463억원) 및 농어민 노후대비를 위해 건강·연금보험료 지속 지원
 -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등 인력확보 및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거주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
 - * 농촌고용인력지원 : ('23년) 127억원 → ('24년안) 219억원 (+92억원)
 -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24→61억원), 농촌의료 왕진버스 신규 도입(32억원)

(억원)

구분	'23	'24案	비고
▪ 농업·농촌	177,423	185,364	· 공익증진직불 28,703(+1,434), 맞춤형농지지원 12,413(+3,835)
▪ 수산·어촌	29,560	31,198	· 수산물소비쿠폰 1,338(+698), 어촌신활력증진 962(+518)
▪ 임업·산촌	27,945	28,241	· 임도시설 1,807(+161), 사방사업 2,524(+314)
▪ 식품업	8,847	8,892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946(+71)
합계	243,775	253,774	전년대비 +4.1%

9 국방 분야

◇ 비대칭 전력, 3축체계 구축 등 첨단 기반 전투력 강화
 ◇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 개선으로 장병 사기진작

□ 무인기·전자전 등 다변화된 위협에 대응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첨단전력 강화

○ (비대칭전력)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0.3조원)

* (AI유·무인복합)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신규}(100억원), 다목적무인차량^{신규}(44억원) (첨단기술 新영역) 근거리정찰드론(+142억원), 초소형위성체계 기술개발(+461억원)

○ (3축체계)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능력 제고(+1.0조원)

* (전략표적타격) F-15K 성능개량^{신규}(246억원), KDX-II 성능개량^{신규}(192억원) 등 (한국형미사일방어) 광개토-III Batch-II(+1,443억원), 철매-II 성능개량 2차(+1,042억원) (압도적대응) UH/HH-60 성능개량^{신규}(290억원), 230mm급다련장(+1,385억원) 등 (3축기반) 항공통제기 2차(+1,089억원), Link-16 성능개량(+578억원) 등

□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 개선에 투자 확대

○ (초급간부) 녹물관사 제로화 등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 강화(+0.3조원)

* 노후숙소 전량 개선(1.4→4.2만개), 주거시설 확대(1.7→1.9만개, 모듈러 숙소 250개 포함) 주택수당 지급범위 확대(3년이상 복무→3년미만 간부 포함, +0.5만명) 단기복무장려금 인상(장교 +300만원/부사관 +250만원) 대상 확대(+500명)

○ (병사) 병 봉급 인상 및 플리스형 스웨터 쏠 장병 지급, 얼음정수기 신규 보급을 통한 장병 사기진작 도모(+0.8조원)

* 병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병장기준 月130→165만원(+26.9%) 플리스형 스웨터 쏠장병 보급, 얼음정수기 보급^{신규}(1.5만대)

(억원)

구 분	'23	'24案	비 고
▪ 방위력 개선	169,169	177,986	· GOP 과학화(100억원), 핵 초소형위성체계(+461억원) · F-15K(246억원), 특수작전헬기(290억원) 성능개량
▪ 전력운영	400,974	417,899	· 주거환경개선 6,784→9,456억원(+2,672억원) · 병봉급 인상 (병장 130→165만원, +26.9%) · 얼음정수기(15만대, +66억원), 플리스형스웨터(+67억원)
합 계	570,143	595,885	전년대비 +4.5%

10 **외교·통일 분야**

- ◇ 국격·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ODA 확대로 국익창출
- ◇ UN안보리 활동, 북한인권 인식 제고 등 국제질서 수호 기여
- ◇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른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공급망 등 국익 확보 및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한 ODA 확대(3.6→5.0조원)
 -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신규 1,300억원)으로 우리 기업 진출기반 조성, 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등 전략지역 지원(1.0→1.3조원)
 - 자연재해, 지역분쟁, 식량위기 등에 대응하여 재난구호·식량·의료 등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0.3→0.7조원)
- 2024-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입 활동^{신규}(20억원) 등 글로벌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
 - 2025 APEC 의장국^{신규}(25억원) 수입 및 개최준비, 인도-태평양 전략이행^{신규}(8억원)으로 주도적 외교활동 수행
 - 유엔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신규}(35억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
-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콘텐츠 제작^{신규}(16억원), 북한인권전시관 건립^{신규}(104억원) 등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 견인
 -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인상(9→10백만원)으로 초기 지원 강화(+4억원)
-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 모국과 연대감 강화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 추진
 - *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 2,300→3,000명,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신규, 25명)
 - 역사적 특수동포(고려인, 사할린동포) 및 소외된 취약동포를 모국 초청^{신규}(500명)하여 한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억원)

구 분	'23	'24案	비 고
· 외교·통상 부문	49,394	65,125	· 대 개도국 차관(15,030→20,320) 등
· 통일 부문	14,698	11,435	·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16) 등
합 계	64,092	76,560	전년대비 +19.5%

11 공공질서·안전 분야

- ◇ 민생침해 범죄 예방·대응 강화 및 범죄피해 약자 지원 확대
- ◇ 재난안전 예방투자 확대 및 디지털플랫폼 활용 대응 고도화

- 마약·스토킹 등 국민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
 - 마약범죄 근절 위해 예방교육*, 마약 수사·감시 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예방→수사→재활 전주기 체계적 지원
 - * 대국민 예방교육('23년 33만명→'24년 205만명), 청소년 대상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 원스톱솔루션 센터* 설치(+31억원),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증원(43→53명, +10명) 등 추진
 - * 각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한 곳에서 맞춤형 지원
-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한 투자 대폭확대,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국민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 하천·저수지·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정비 조기완료 등 내실화, 지역별 안전진단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 안전훈련 강화 등
 - * 재해위험지역 정비물량(829→893개소), 5개 권역별 안전진단 시범실시 등
 - 재난관리·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재난상황시 신속대응 지원,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서비스 맞춤형 제공* 등 추진
 - * 스마트폰 위치 기반 재난안전정보 제공, 민간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 활용 접근성 제고

(억원)

구분	'23	'24案	비고
· 법원 및 헌재	22,440	23,138	· 소송구조 지원(59→69), 국선변호 지원(427→432), , 사건기록전자화(16→22), 면접교섭센터 설치(12→17)
· 법무및검찰	44,300	45,520	· 마약수사(49→82),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97→115)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73→211)
· 경찰	128,064	132,978	· 현장경찰 저위험 권총 보급(14→86), 기동대 중형승합차(27→81), 방승 조명차(7→36), 현장 지휘차(+18, 신규)
· 해경	18,260	19,252	· 함정건조(1,742→1,977), VIS구축(228→264)
· 재난관리	16,246	22,440	· 재해위험지역 정비(7,086→8,698), 지역안전개선결선텍(14→27)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81→218)
합계	229,311	243,328	전년대비 +6.1%

- ◇ 모바일 주민등록증, 공공데이터개방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투자 지원
- ◇ 최저신용자, 영세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신규}(164억원), 행정 서비스통합플랫폼(344억원) 등 국민이 체감 가능한 사업을 적극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확대(417→449억원), 디지털서비스개방(23→78억원) 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확산 지원
 -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1,123→1,536억원) 등 디지털 플랫폼정부 인프라 투자 확대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신규}(모펀드 3,000억원)를 조성해 지역경제 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 * (예시)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
-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해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280→560억원) 연장, 햇살론 15 정부재정지원^{신규}(900억) 등 추진
 -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2,800→7,600억원), 청년도약계좌(3,678→5,000억원) 등 확대

(억원)

구 분	'23	'24案	비고
▪ 정부자원관리	10,998	10,805	·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통합구축(1,123→1,536) · 정보보호 인프라확충(254→361)
▪ 지방행정·재정지원	775,938	712,495	· 지방교부세(752,883→667,711) · 지방채 인수(100→26,000)
▪ 재정·금융	262,686	331,616	· 청년도약계좌(3,678→5,000), 새출발기금(2,800→7,600)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280→560), 햇살론15(900)
▪ 일반행정	33,584	35,087	·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1,936→2,262) · 인구주택 총조사(20→263억원)
▪ 입법 및 선거관리	11,537	15,992	· 국회의원선거관리(38→2,810), 선거보전금(1,072) ·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427→505)
▪ 국정운영	6,800	6621	·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183)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5,567→5,356)
합 계	1,121,543	1,112,616	전년대비 △0.8%